

경제민생점검회의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6년 경제 전망

2005. 12. 2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의 진전과 대응

A. 2003년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과 대응

1.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1
2. (원칙과 중장기 시각에 입각한 정책대응) 2

B. 경제상황의 진전

3. (저성장에서 벗어나 잠재성장수준의 정상궤도를 회복) 3
4. (물가 안정세 지속) 5
5.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근본적으로 대응) 5
6. (고용증가세가 회복되고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변화) 6
7. (금융시장 안정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7
8.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 평가가 개선) 8

II.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A. 현 경기상황 평가

9. (지표경기는 상반기중 저점 통과 이후 회복 가시화) 9
10.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 9
11. (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11
12.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 13

B. 성장잠재력 문제

13. (성장률 하락은 추세적 현상) 13
14. (노동투입이 둔화) 14
15. (투자부진 지속) 14
16.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 17
17.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18

C. 경제양극화 문제

18. (경제양극화가 심화) 19
19. (경기 회복에 따라 양극화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 20
20. (양극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21

D. 미래 위험요인과 재정건전성 문제

- 21. (미래 위험요인) 22
- 22.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 23

Ⅲ. 2006년 경제 전망

A. 국내외 경제여건

- 23. (2006년 여건은 2005년보다 나쁘지 않을 전망) 24
- 24. (하방위험요인은 상존) 26

B. 2006년 거시경제의 움직임

- 25. (주요 고려사항) 26
- 26. (민간소비) 27
- 27. (설비투자) 29
- 28. (건설투자) 30
- 29. (수출입) 32
- 30. (고용) 33
- 31. (물가) 35

C. 2006년 경제전망

- 32. (경기회복의 본격화 속에 성장 및 고용 개선 전망) 36
- 33. (하방위험요인은 지속) 36
- 34. (2006년 이후 경제의 모습) 36

Ⅳ. 종합 평가

- 35.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으나 회복의 강도는 과거보다 약한 수준) ... 38
- 36.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지속) 38
- 37. (미래 위험요인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 38

I.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의 진전과 대응

A. 2003년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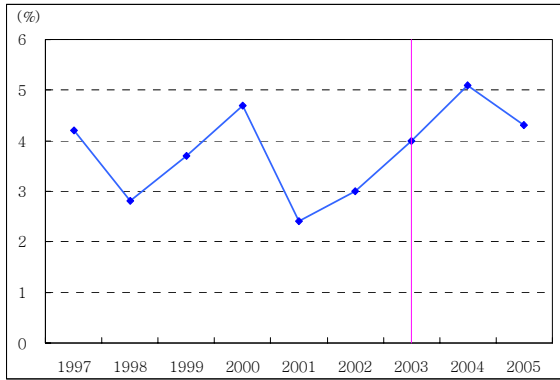
1.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참여정부는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경기흐름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NPT탈퇴, 03.1월), 미-이라크전 발발(03.3월), SARS 발생(03.3~5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적으로도 카드채와 가계부채 문제, 불투명한 기업회계관행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도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출범 이후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2년까지의 과소비에 따른 대규모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화물연대파업(03.5월)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분출하였습니다. 태풍 매미(03.9월), 광우병·조류독감(04.1월) 등 부담 요인도 수시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대내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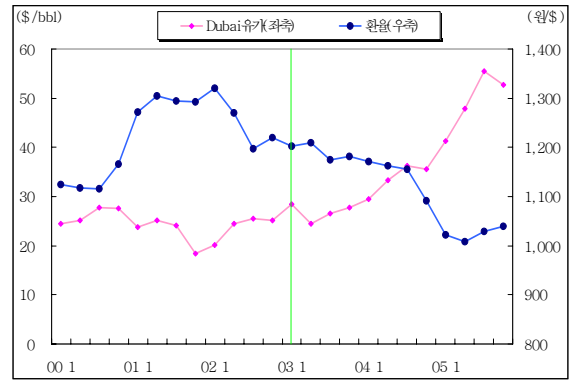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지난 3년간 세계경기, 국제유가 등 주요 대외 변수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어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2002년까지 배럴당 25불 내외에 머무르던 유가가 50불 수준으로 급등하였고, 달러화 약세 속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2004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었습니다.

세계경제 성장



유가와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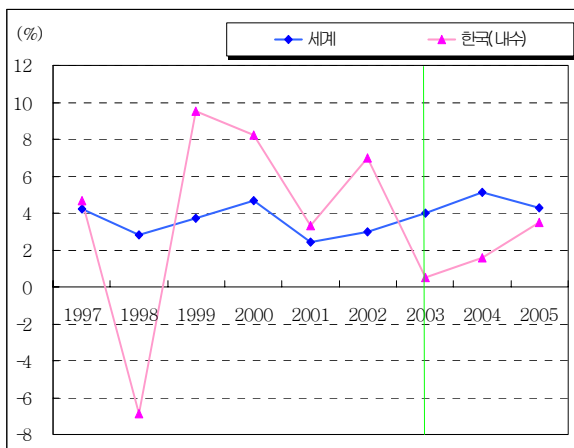


- 국내적으로도 중국 부상에 따른 제조업 기반 약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성향과 금융기관의 대출행태가 보수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수위축과 더불어 개방과 경쟁의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표출 등으로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2. (원칙과 중장기 시각에 입각한 정책대응)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였으며 극심한 내수부진 속에서도 무리한 경기부양 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의 개혁 및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러한 큰 틀에서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기술혁신,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확충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산업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벤처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양극화로 인한 취약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며,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동반성장의 기틀도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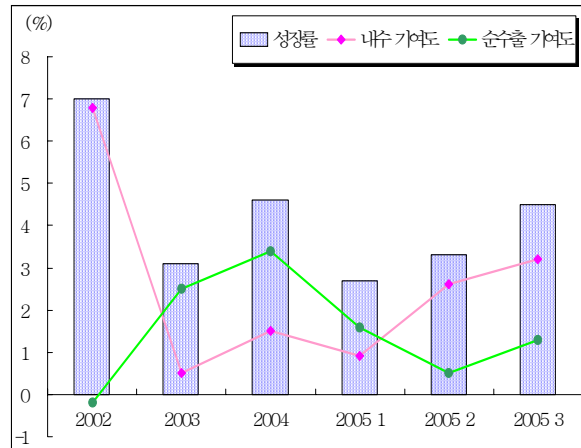
B. 경제상황의 진전

3. (저성장에서 벗어나 잠재성장수준의 정상궤도를 회복) 경기순환적 하강국면에 출범 초기의 불리한 대내외 여건이 겹쳐 2003년 이후 3~4%대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던 우리 경제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속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낮은 성장세는 2001~0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의 후유증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 주로 기인된 것으로서 국내경기가 세계경기 흐름과 반대방향의 움직임을 보였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경기흐름과 국내 경기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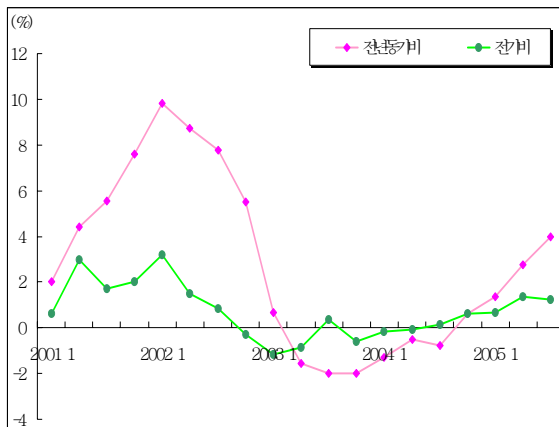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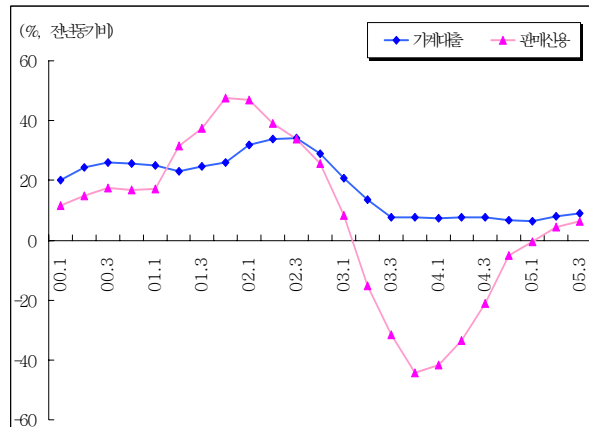
<자료원> 세계경기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05.9)

- 성장의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5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의 정상화는 그동안 소비를 억누르고 있던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히 진전된 데 따른 것으로서, 2005년 들어서는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3~04년간 감소세를 나타낸 판매신용도 증가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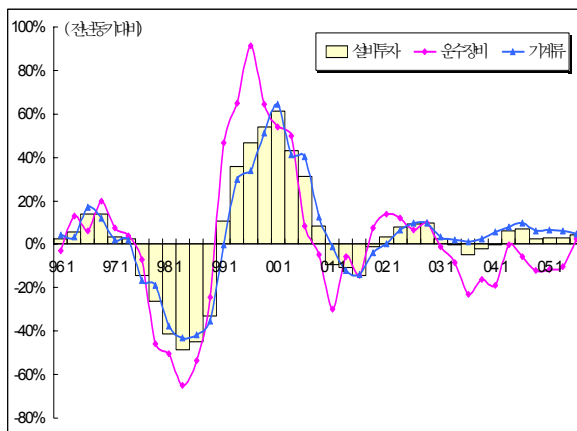


가계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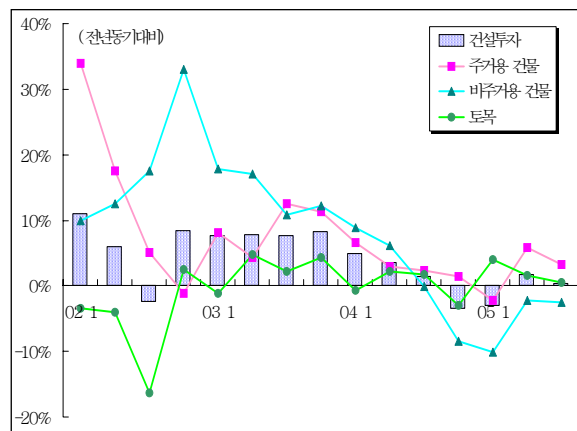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2003년 감소세를 나타낸 후 **200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되었으나 기계류 투자(비중 82%)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운수장비 투자(비중 18%)의 감소세가 이어가면서 전체로는 낮은 수준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들어 운수장비가 11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건설투자는 2004년 이후 건설경기 주기상 **위축국면에 접어들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비중 30%)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건설(비중 30%)과 토목건설(비중 40%)의 증가세도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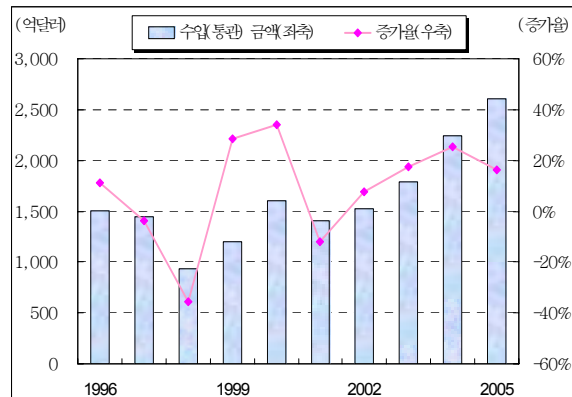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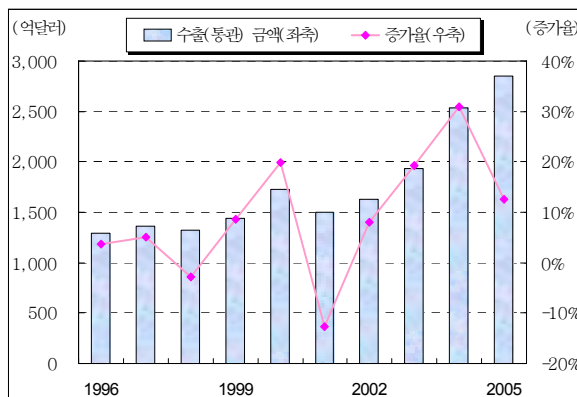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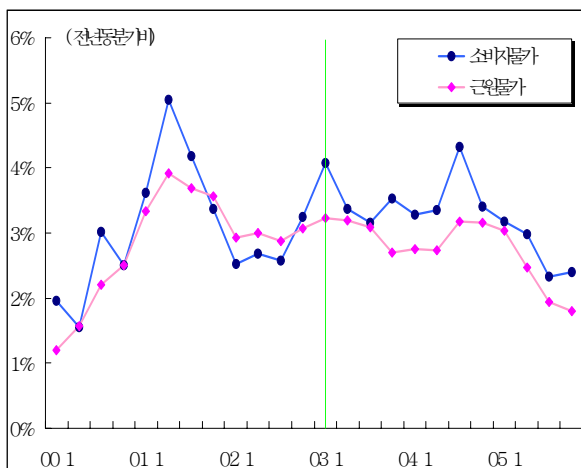
- 수출은 견조한 해외수요를 바탕으로 **2003~05년간 3년 연속 두 자리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003년 1,900억불 수준으로부터 금년에는 2,8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이들 업종과 지역의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입은 2003년 이후 석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20%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관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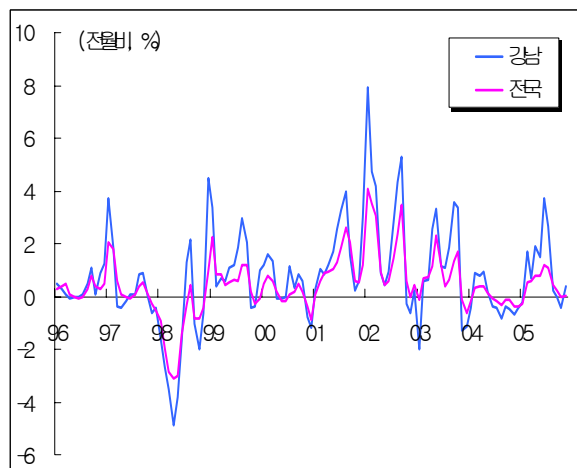


4. (물가 안정세 지속) 2003년 이후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05년에도 내수 부진으로 총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의 상승요인이 환율하락 등으로 상당부분 상쇄되면서 소비자물가는 2%대 후반, 근원물가는 2%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근본적으로 대응)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 등 부동산시장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한 결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2001~02년중 내수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크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은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03년 10.29 대책으로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2005년 2월부터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와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불안심리가 재연되었습니다. 토지시장의 경우에도 2004년에는 소비자물가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토지시장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8.31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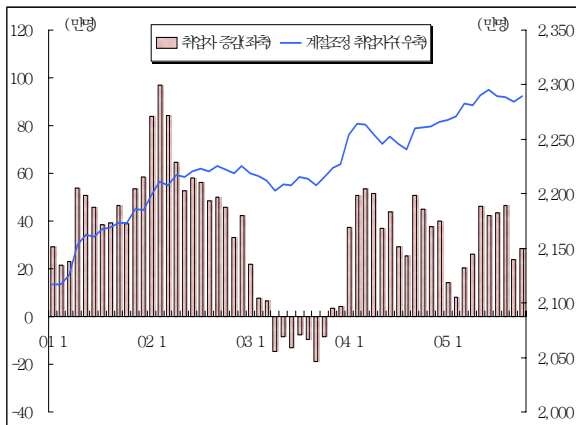
아파트가격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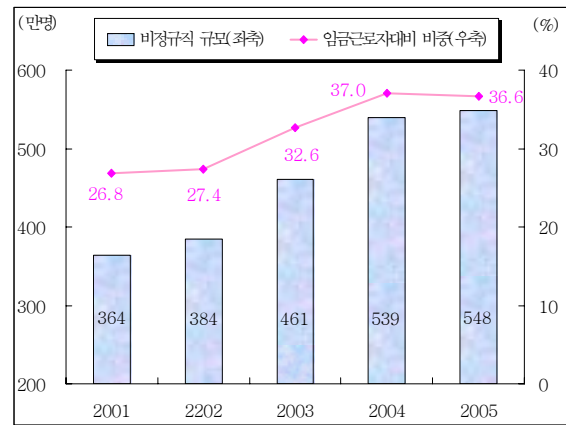
6. (고용증가세가 회복되고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변화) 경기부진으로 2003년중 3만명 감소했던 취업자가 2004년에는 42만명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2005년에도 31만명 수준 증가하는 등 장기추세 수준(34만명 내외)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연평균 36만명 증가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2003~04년중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들지 않는 등 부정적 측면도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자 증가 추이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 참여정부 출범초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규가 빈발했던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정부 대응으로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고, 무리한 파업이 자진 철회되는 등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관련 지표 추이

	00	01	02	03	04	05.1~11
· 노사분규건수(건)	250	235	322	322	462	274(△39%)
· 근로손실일수(천일)	1,894	1,083	1,580	1,299	1,190	802(△31%)
· 불법분규건수(건)	67	55	66	29	58	1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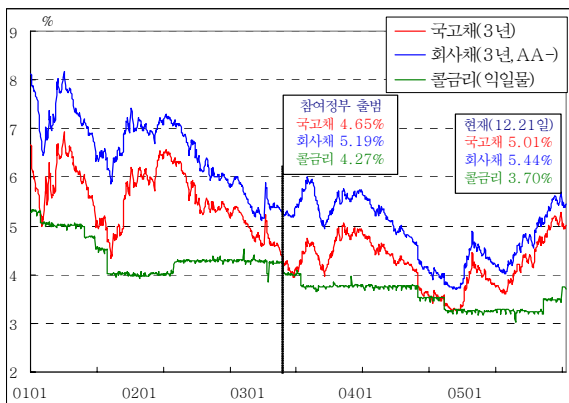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기피요인으로 지적되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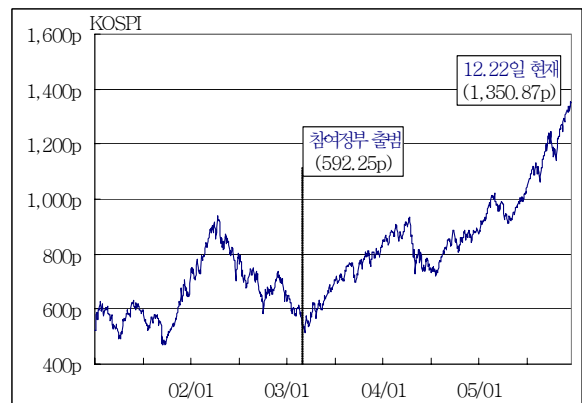
7. (금융시장 안정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참여정부 출범 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하였고, 지속적인 금융 구조조정 및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금융산업의 체질도 강화되었습니다.

- 시장금리는 최근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전후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카드채 위기 등으로 500p 수준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시장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수익성 개선 등 체질 강화가 반영되면서 2005년 들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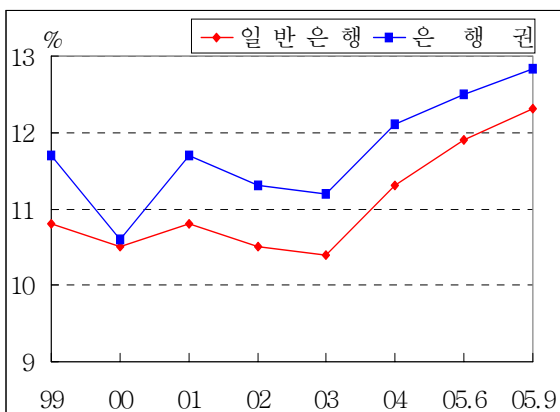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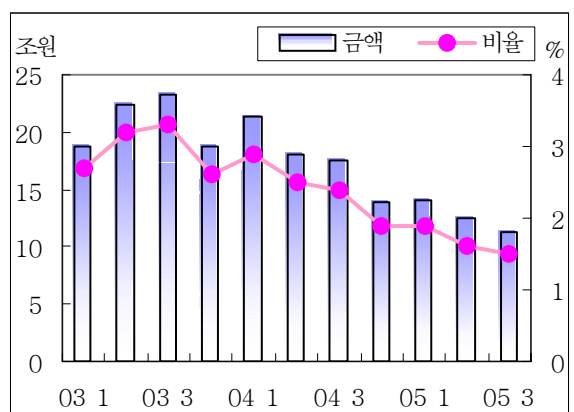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2003년 11% 내외에서 12%대로 상승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초기 3%를 상회하던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도 최근 1%대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되는 등 금융산업의 체질도 강화되었습니다.

BIS 비율 추이(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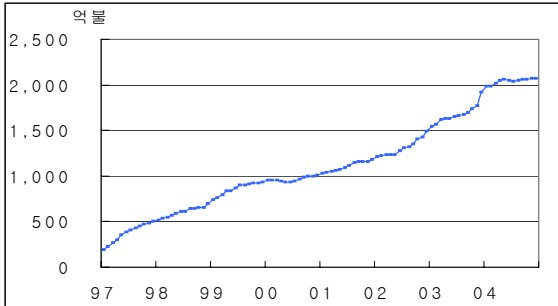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 추이(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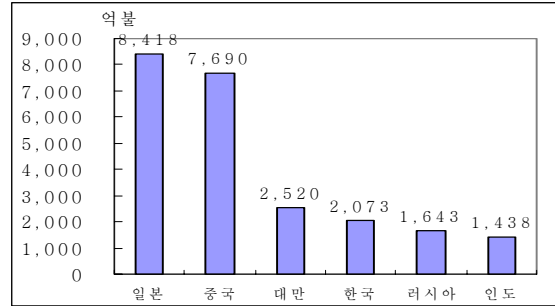
8.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 평가가 개선) 외환보유고 증가, 경기 회복 등 거시경제 안정,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 평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당시 39억불까지 낮아졌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2,076억불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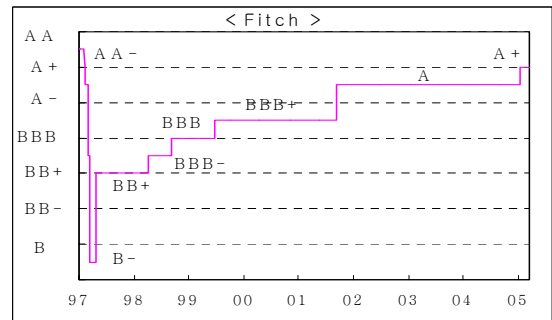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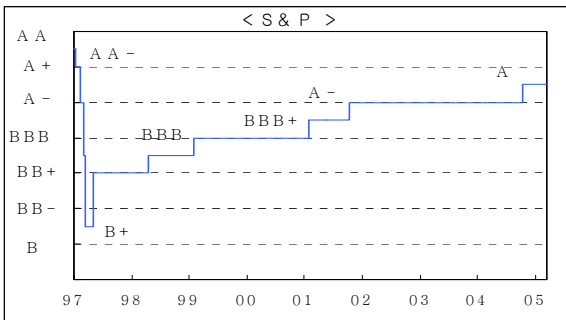


외환 보유고 국제 순위



-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졌습니다. 거시경제 안정, 구조개혁, 남북관계 진전 등이 평가를 받으면서 2005년 7월 S&P가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0월에는 Fitch역시 A에서 A+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3~04년에는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들어 경기 회복과 그간의 개혁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

	(대상국 수*)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WEF	(117)	29	23	25	18	29	17
IMD	(60)	29	29	29	37	35	29
헤리티지	(155)	33	29	38	52	46	45

<주> 05년 기준(IMD 매년 5월, WEF 매년 9월, 헤리티지 매년 1월)

II.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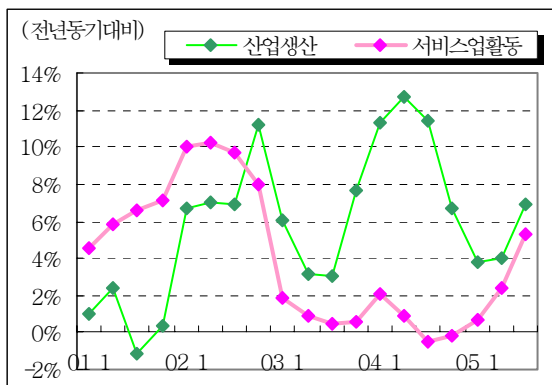
A. 현 경기상황 평가

9. (지표경기는 상반기중 저점 통과 이후 회복 가시화) 2005년 들어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흐름이 강화되어 상반기중 경기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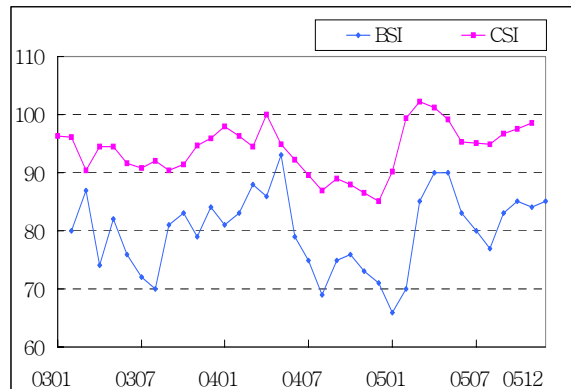
최근의 경기회복은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 자생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내수와 수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 지표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의 증가 미흡,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양극화 진전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가계와 기업 심리지표는 아직 회복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활동 추이



심리 지표 추이



-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 증가가 미흡) 체감경기가 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로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증가세 둔화를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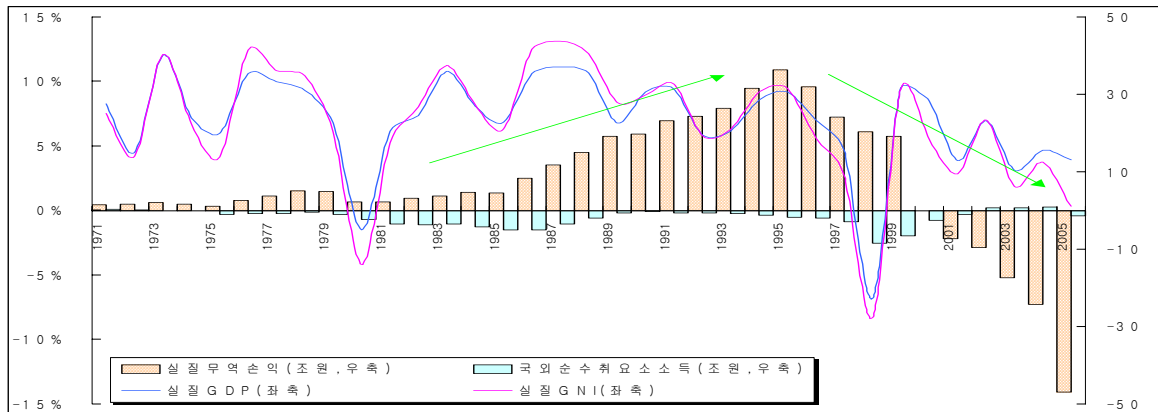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기술진보가 빠른 IT 분야가 수출주력으로 자리잡은 90년대 후반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무역손실이 확대되어 이를 고려한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을 하회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손실은 국내 경제주체 중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성 개선 등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이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임금 감축, 제품가격 상승 등 가계부문으로의 부담 전가는 크지 않았습니다.

* 제조업 영업이익률(%) : (03상반)8.2→(04상반)12.1→(05상반)7.7

* 제조업 현금 보유규모(연말, 조원) : (02년)47→(03년)60→(04년)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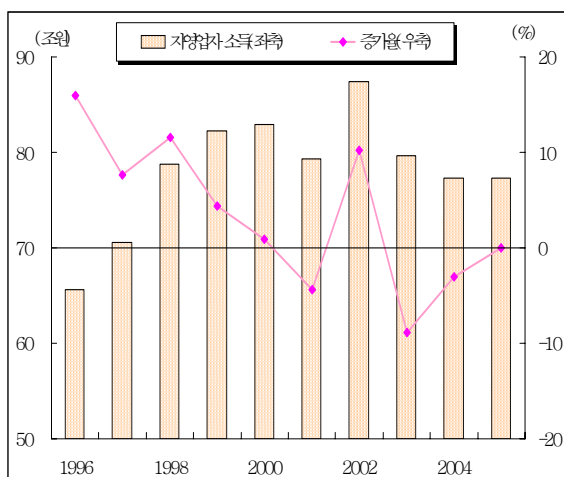
실질 GDP와 실질 GN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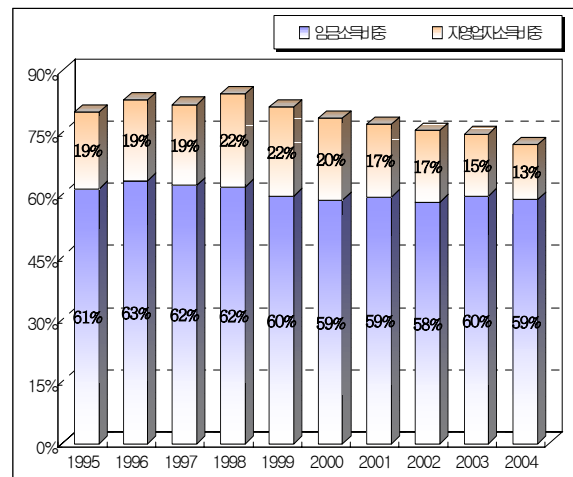
-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진) 그간의 내수경기 침체, 경제양극화와 공급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된 것도 체감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신규 진입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임금소득 비중은 60%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비중은 20%대에서 13%로 하락) 앞으로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여건도 개선될 것이나 이를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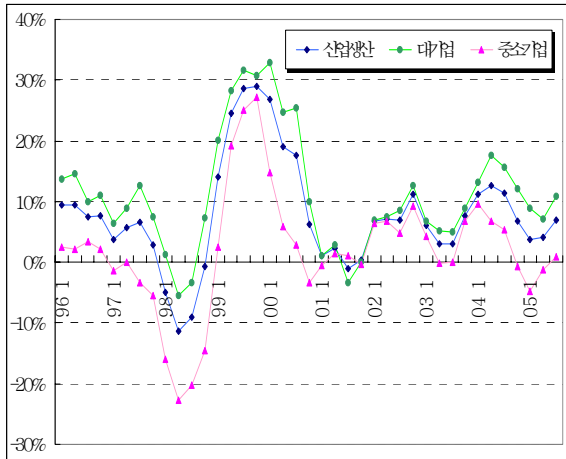
국민소득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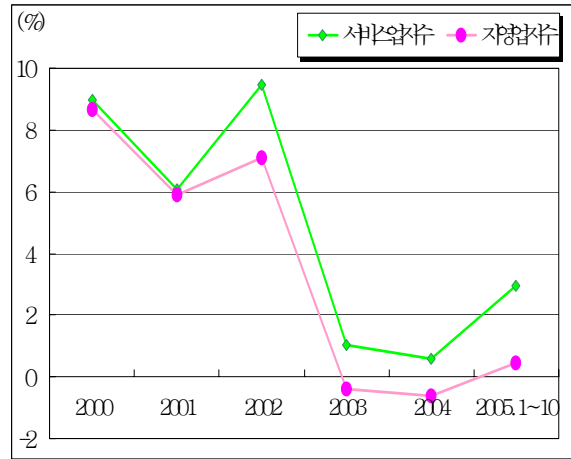
<주> 2005년 자영업자 소득은 추정치임

생산활동 측면에서 제조 중소기업은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증가세가 여전히 낮으며, 서비스업 부문도 전체적으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 금융업, 의료업 등을 제외한 영세 서비스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산업생산 추이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활동 추이



<주> 자영업자 활동지수는 서비스업 활동지수에서 영세소매업, 여관업, 음식점, 택시업 등 영세한 활동을 중심으로 별도 산출

11. (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아직 완만하며, 내수 회복이 「투자 확대 → 고용 창출 →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의 형성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 (소득여건 개선이 안정적인 소비증가의 관건) 2000년대 들어 가계소비는 7.8% 증가하였으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5.7%로 둔화되어 안정적인 소비증가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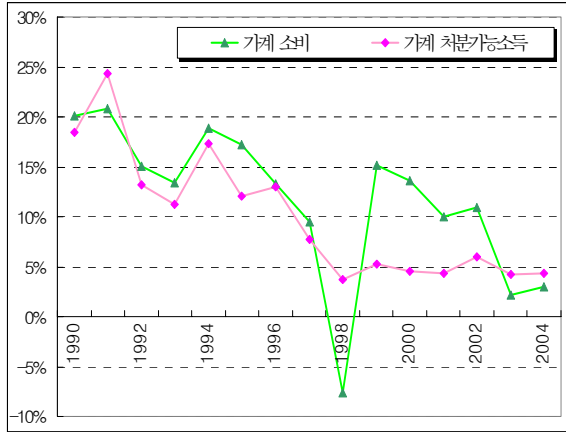
경제주체별 소득 및 가계소비 추이 (연평균, %, 명목기준)

	국민소득	가 계	법 인	정 부	가계소비
1980~89년	16.9	16.6	20.0	16.6	15.4
1990~99년	12.4	12.6	6.4	14.8	13.3
2000~04년	8.7	5.7	25.5	8.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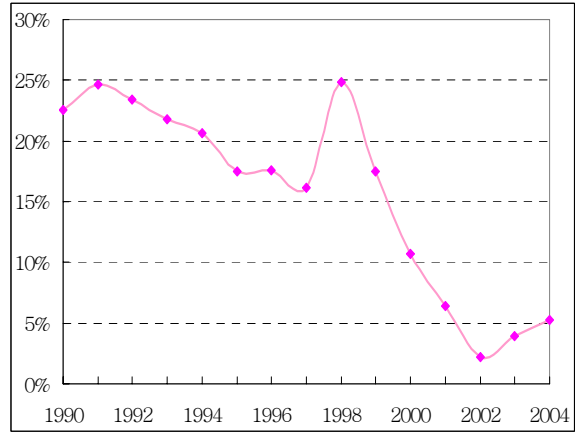
특히, 2001~02년에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소비가 이루어진 결과 가계저축률이 10%대 초반에서 2%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저축률이 5%대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증가가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가계저축률(% , 03년) : 프랑스 11.1, 독일 10.7, 이태리 10.5, 아일랜드 8.3, 일본 6.3, 미국 1.4

가계 소비와 소득 추이(명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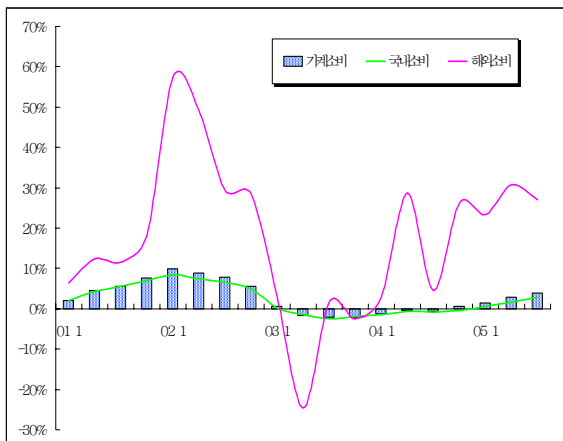
가계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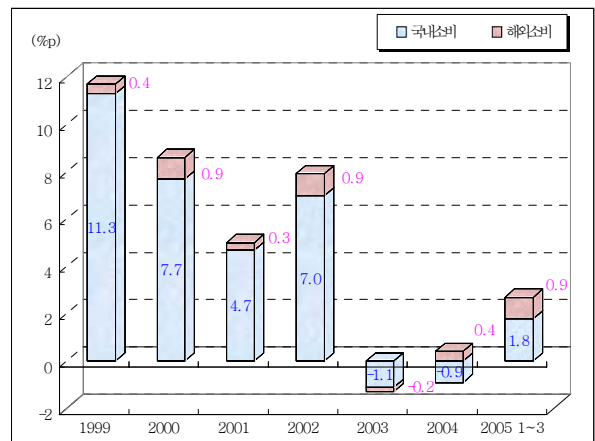
- (소비구조의 변화로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 개방의 진전, 소득의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득계층별 소비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국내소비는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해외소비는 30% 수준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의 급증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해외 소비 증가율(%)



국내·해외 소비 기여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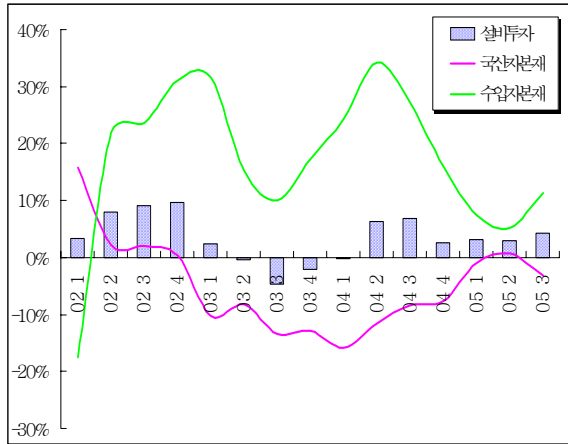


-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낮고 수입의존도가 증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나 정밀기기 등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1%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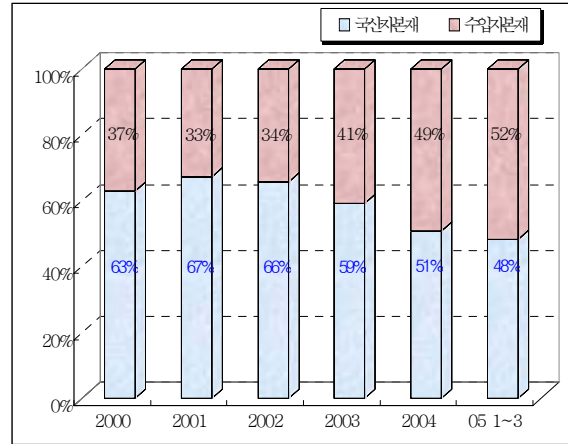
* 05년 상반기중 수입자본재 비중 : 반도체 제조장비 76%, 정밀기계 93%

이러한 자본재 수입비중의 상승 현상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로 투자의 국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축소(leakage effect)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및 수입자본재 증가 추이



국산·수입자본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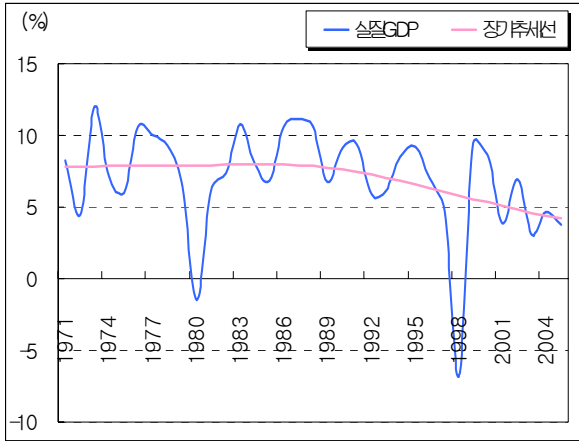
12.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 이러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운용은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여 현재의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소비 등 내수회복이 고용창출과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B. 성장잠재력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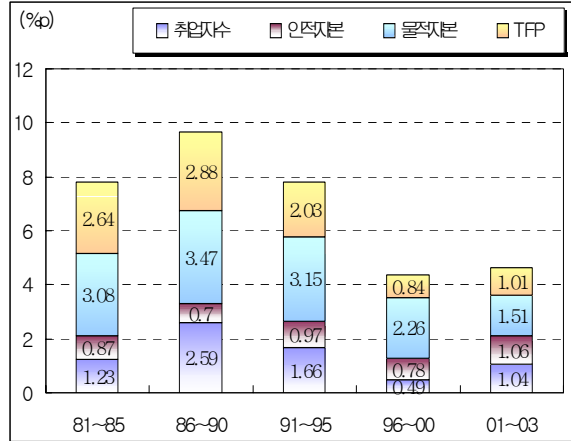
13. (성장률 하락은 추세적 현상) 1960년대 이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는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의 성숙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요소투입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미흡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요소투입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요소투입이 둔화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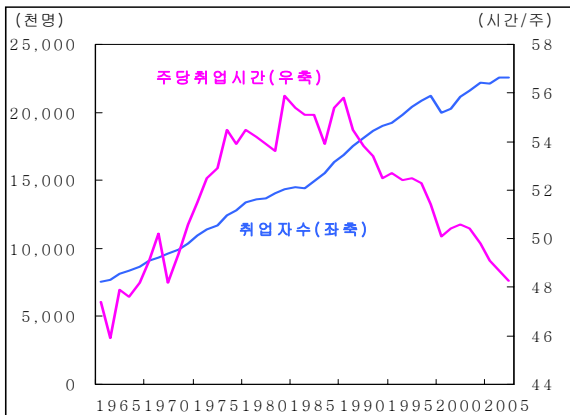


성장 요인별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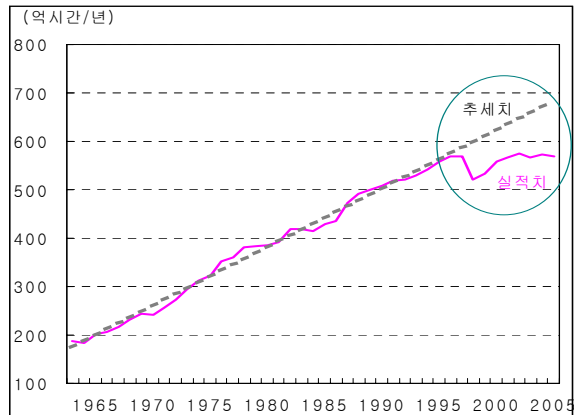


14. (노동투입이 둔화)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04년 한국 66.0%, OECD 평균 70.1%, 15~64세) 여가 선호 및 주 40시간 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총취업시간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자 및 취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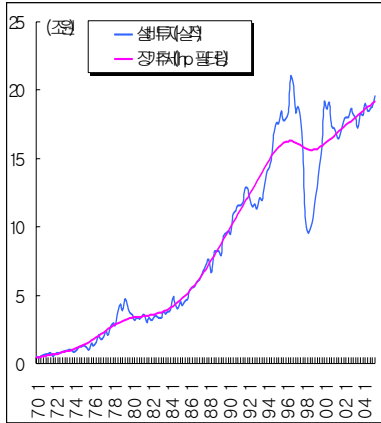
총취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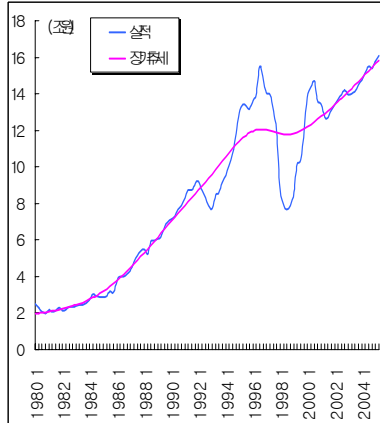
15. (투자부진 지속) 1970년대 연평균 20%, 1980~90년대 중반에 10% 이상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2000년대 이후 경기 부진에 구조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투자부진 야기) 최근의 투자부진은 기계류 투자보다 운수장비 투자의 부진에 원인이 있습니다. 기계류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도 8%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운수장비 투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추세적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Delta 1\%$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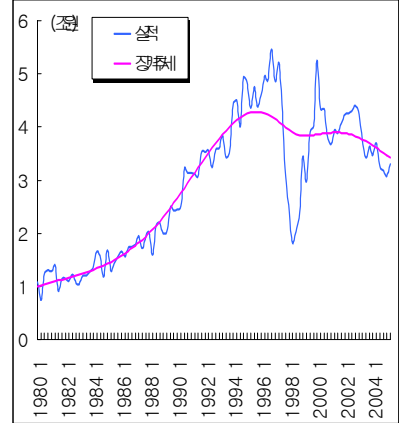
설비투자 추이



기계류 투자 추이



운수장비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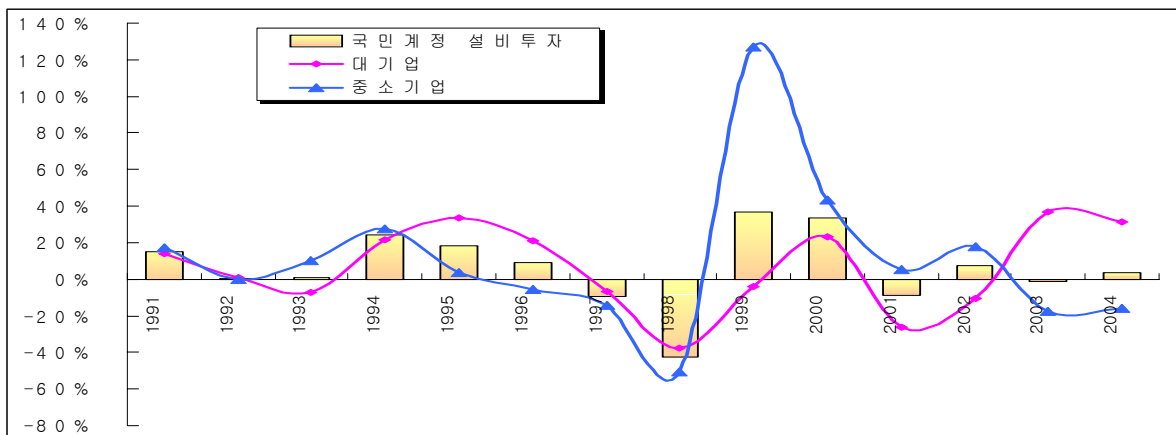


통상 운수장비 투자의 움직임은 내수경기와 상관성이 높은데, 이는 최근의 투자부진이 경기순환적 요인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VAR) 결과 민간소비 1% 충격에 설비투자가 2~3%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구조조정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가 감소세)**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최근의 투자부진은 중소기업 투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상장기업) 투자는 2003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2002년까지 벤처 거품,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후 2003년부터 구조조정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추이 (실질 기준)



<자료원> KDI "상장기업 설비투자 조사" (05.7) : 대기업 투자는 상장기업 투자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투자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에서 상장기업 설비투자를 차감하여 계산

- (구조적 요인은 지속) 경기순환적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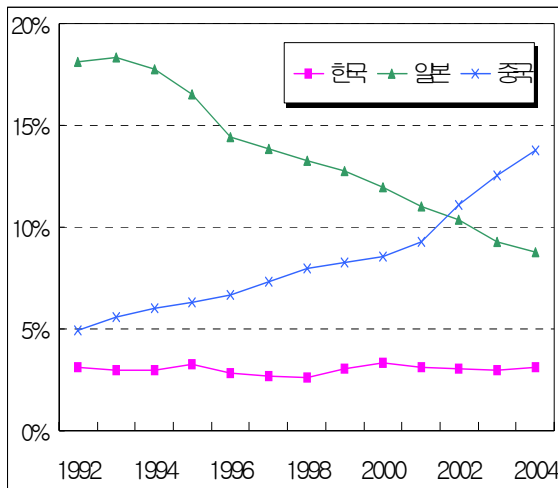
(i)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對중국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외 시장 침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출의 점유율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對중국 투자 추이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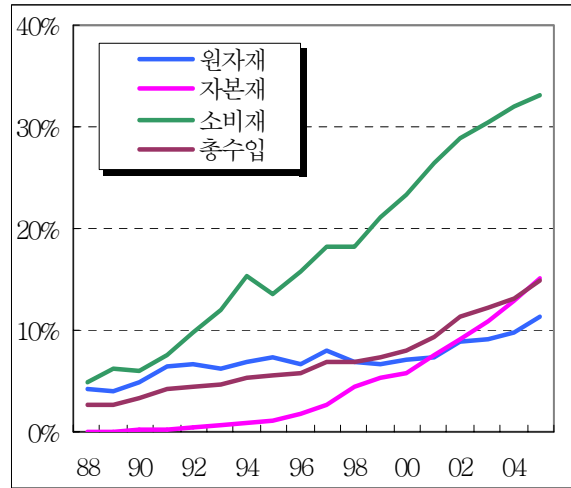
	90~00년(연평균)	01년	02년	03년	04년
· 對중국 투자	4.9	6.3	10.2	16.3	22.8
- 대 기업	3.1(57)	2.9(47)	4.3(42)	6.7(41)	8.2(36)
- 중소기업	1.7(43)	3.4(53)	5.9(58)	9.6(59)	14.6(64)

<註> ()는 전체 대중국 투자대비 비중(%)

미국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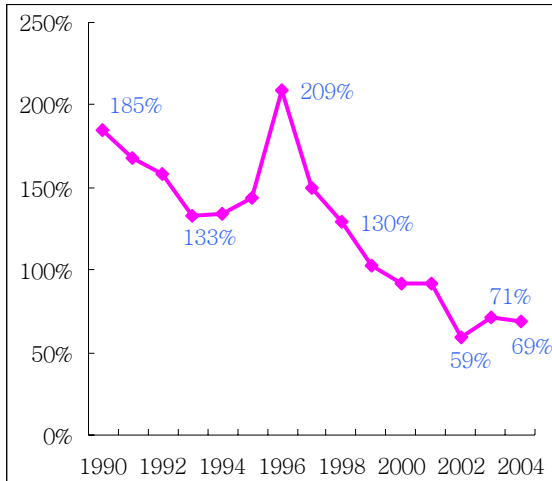


중국수입 비중 추이(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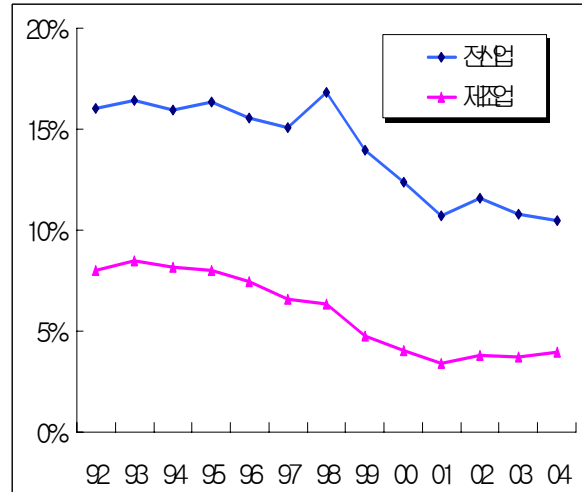


(ii)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투자성향과 금융기관의 대출행태가 보수화된 것도 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입니다. 외환위기 이전 200% 수준이었던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대비 설비투자비율이 2004년에 70%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금융기관 경영의 보수화로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자금 공급유인이 약화되면서 대출금 중 기업시설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외환위기 직전 17%에서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설비투자/영업이익 비율



기업 시설자금 대출비중



(iii) 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여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에 따르는 투자 위험은 과거에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와 금융기관의 암묵적 보험(Korea Inc. 개념)을 통해 완충하였으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사라졌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유인 시스템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낮추는 방안중의 하나는 투자의 진입 및 퇴출비용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 덩어리 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미흡에 따른 고지가·고임금 등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6.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 요소투입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려면 이를 상쇄하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정책노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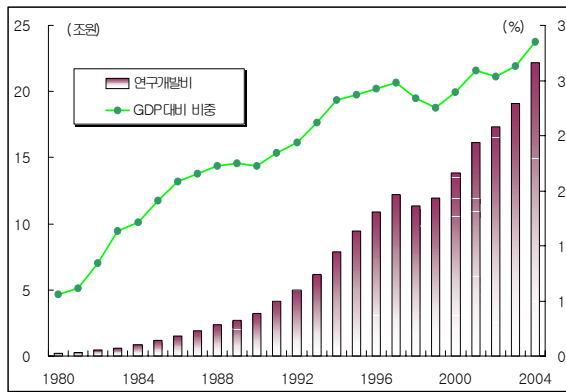
- (R&D 투자규모의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GDP대비 비율(2004년 2.9%)로는 OECD 평균(2.2%)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확대와 함께 민간부문이 R&D 투자를 적극 늘려왔다는 점도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총 연구개발비의 74%를 민간이 담당, OECD 평균은 62%) 다만, R&D 투자 영역이 IT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투자 효율성이 낮으며 비제조업의 각종 진입장벽으로 제조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비제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첨단 업종별 R&D 지출 점유비중 (00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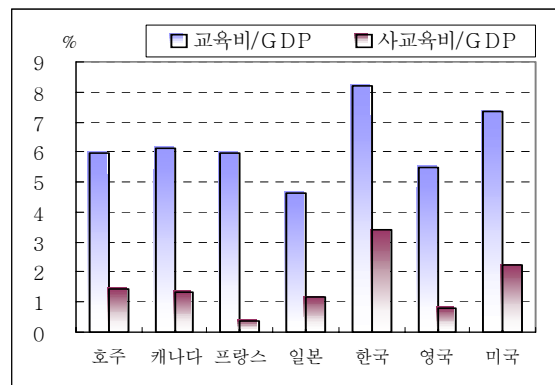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 의약품	1.7	10.0	7.3	6.7	30.8
· 컴퓨터·사무용기기	8.5	8.0	11.4	2.1	1.2
· 전자·통신 기기	43.8	19.9	19.8	11.1	11.1
· 의료·정밀·광학기기	1.2	14.8	4.7	5.4	5.2
· 항공기	3.5	8.0	0.8	7.2	11.8
(첨단기술업종 계)	(58.7)	(60.7)	(44.0)	(33.1)	(60.1)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4

연구개발투자 추이



교육투자 추이



-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GDP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고급인력의 경쟁력 순위(IMD, 03년,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 대상)
: 기술인력 20위, 재무기술인력 22위, 상위 경영자 22위

* 학업성취도 비교(UNESCO, 2003년)

- 전체 순위 :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
- 상위 5% 순위 :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

17.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요소투입의 둔화 추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신성장동력 발굴, 구조개혁의 지속,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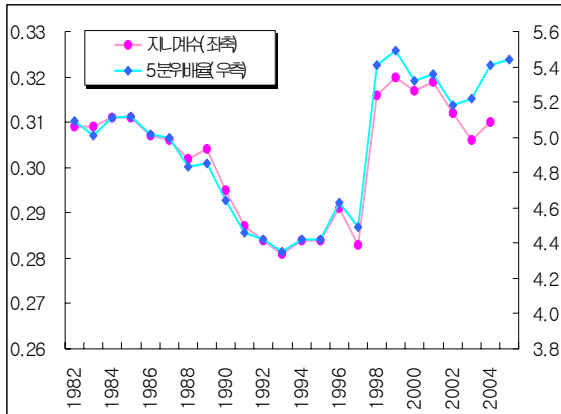
또한, 경제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아직은 투자확대 여지가 크므로 투자애로요인 해소와 함께 여성인력 활용 등 노동투입 둔화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C. 경제양극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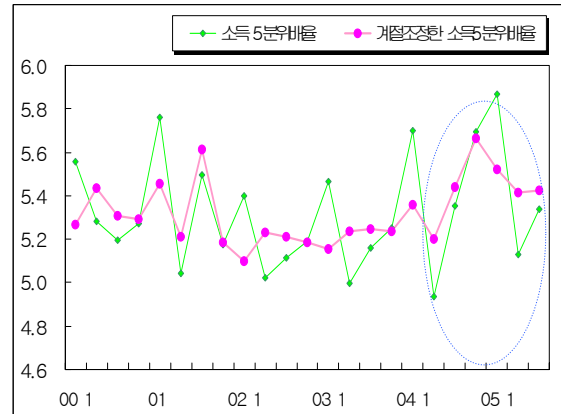
18. (경제 양극화가 심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온 양극화 현상은 2003년 이후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소득계층간 격차의 확대) 2001~02년중 내수경기 호조 속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상승하는 등 소득계층간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 들어 소득 5분위배율이 점차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과 함께 소득분배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배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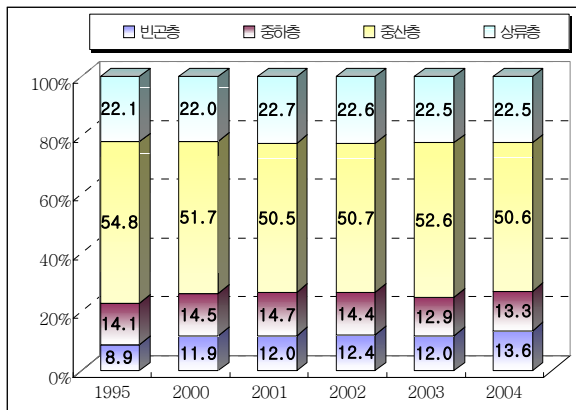


계절조정 소득5분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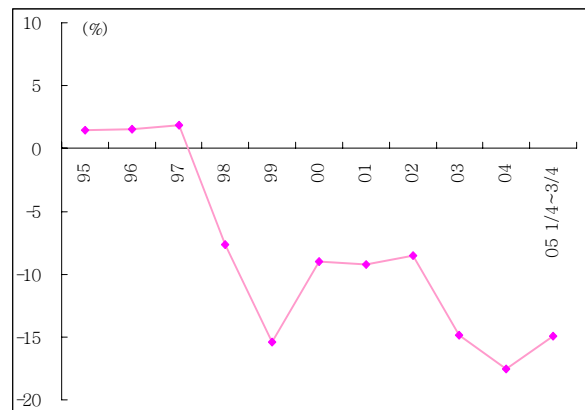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분포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류층 비중은 22% 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경기적 영향으로 중산층 비중이 낮아진 대신 중하층과 빈곤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빈곤계층의 소득여건은 2005년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적자율이 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분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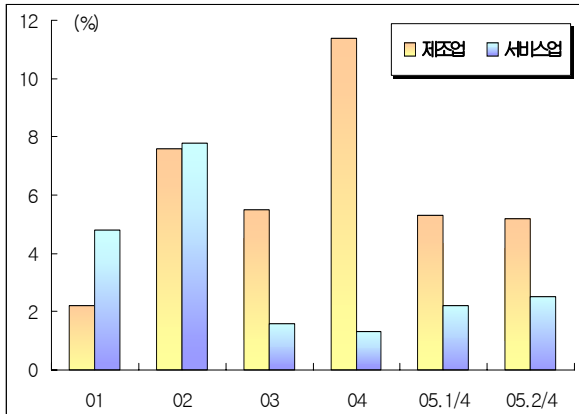
소득1분위(하위 20%) 흑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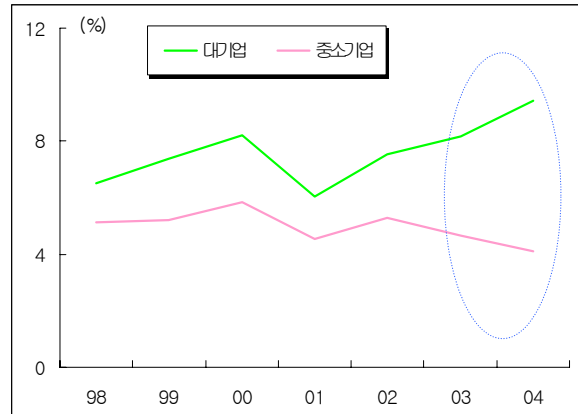
<註> 소득계층별 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류층, 70~150%를 중산층, 50~70%를 중하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

- (산업간·기업간 격차 확대) 제조업은 호조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선도산업과 전통산업, 유망업종과 영세업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재무구조, 수익성 등에서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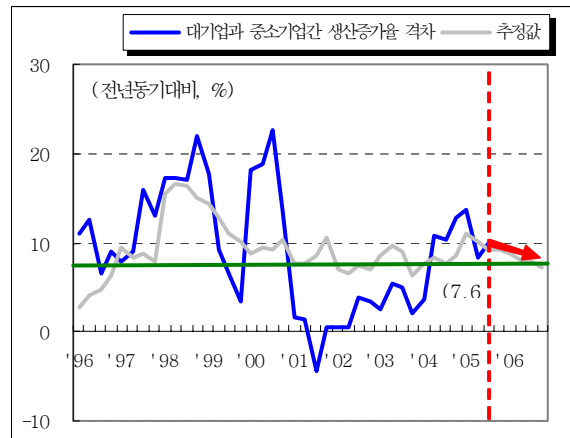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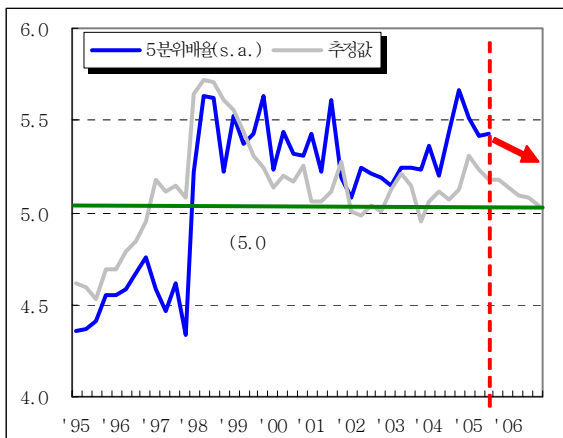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19. (경기 회복에 따라 양극화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 최근 양극화가 추세적인 수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2003년 이후의 내수침체의 영향이 크며, 이는 최근 부진한 산업·기업·소득계층의 대부분이 내수와 관련된 부문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양극화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GDP와 잠재 GDP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과 양극화 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잠재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 5분위 비율이 2005년의 5.5에서 5.2~5.3으로 하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도 2005년의 11%p 수준에서 8~9%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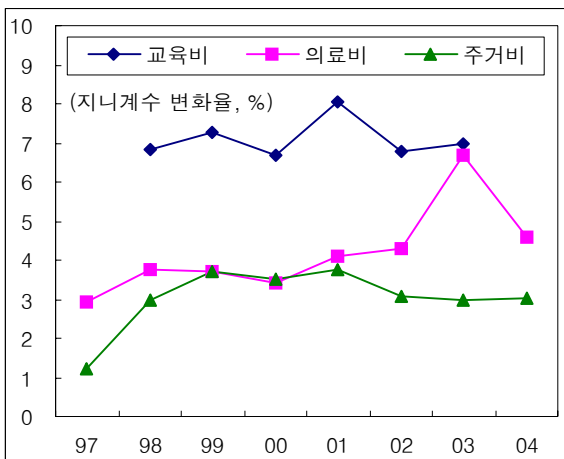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 및 전망



20. (양극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경기 회복에 따른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과 인적자본·기술력 등 혁신기반의 격차도 단기간의 정책대응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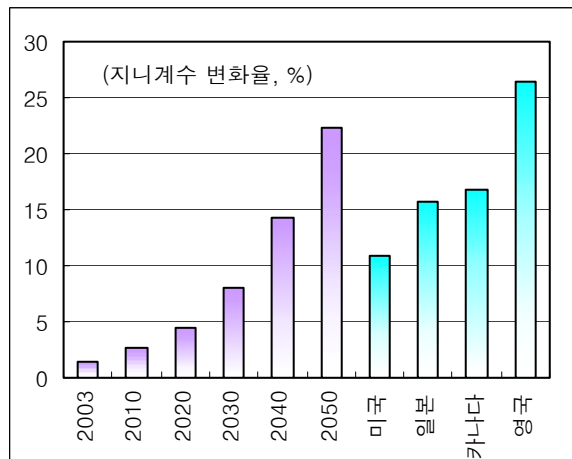
- (양극화는 복지 뿐 아니라 성장에도 악영향)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빈곤의 대물림과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기반을 훼손하는 한편 복지 등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빈곤층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재분배효과가 개선) 참여정부 들어 사회 복지분야 정부지출이 의료·주거·교육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출항목별로 보면 규모가 큰 교육비 지출의 재분배효과가 여타 지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지출·조세 등 재정정책의 재분배효과는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복지사각지대의 존재 등 사회안전망도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고령화 진전,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라 재분배효과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출항목별 재분배 효과



<자료원> 조세연구원(2005.12월)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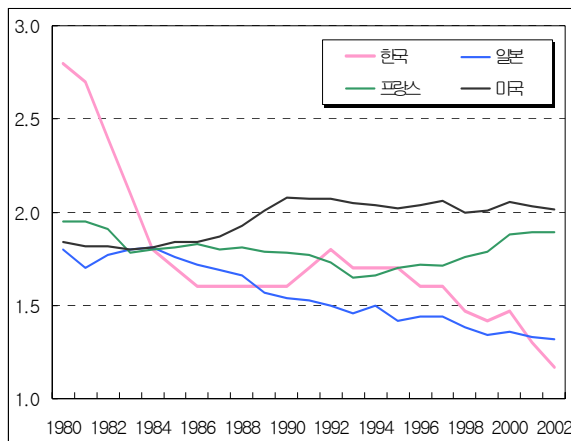
<자료원> 조세연구원(2004.8월)

D. 미래 위험요인과 재정건전성 문제

21. (미래 위험요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어 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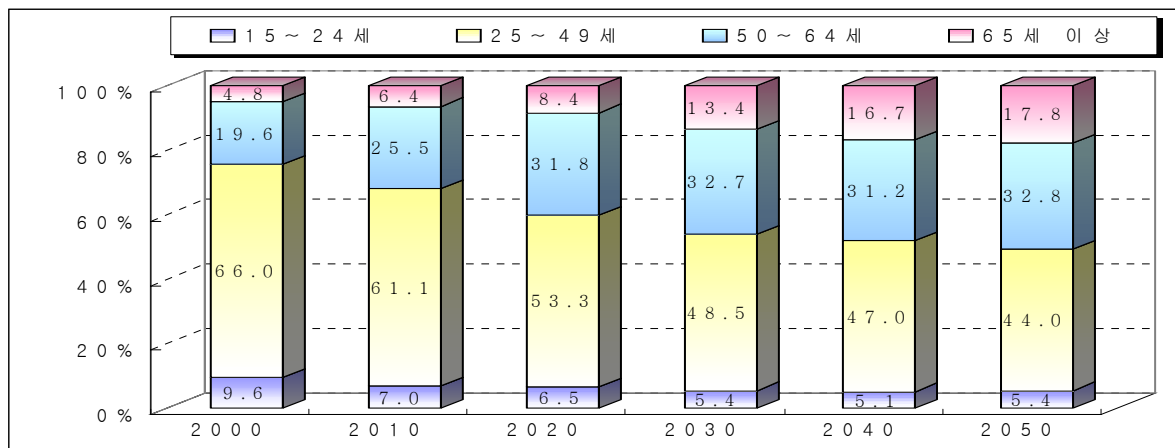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 추이 및 고령화 진행 속도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7%→ 14%	14%→ 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이에 따라 2005년 총인구의 72%(3,467만명)를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50년경에는 총인구의 54%(2,275만명)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등 노동투입이 크게 둔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노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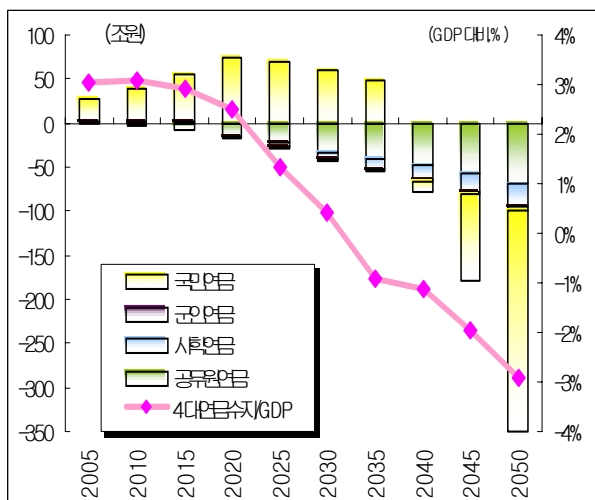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은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비율이 현재의 9%대에서 203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2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령인구 비중(%) : (04년)8.7→(10년)14.0→(20년)15.7→(30년)24.1
 복지지출/GDP(%) : (04년)9.6→(10년)10.9→(20년)17.9→(30년)22.8
 <자료원 : KDI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04.12)">

- **(공적연금 재정안정 문제)** 공적연금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국민·사학연금도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기대응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당기적자 (년도)	기금고갈 (년도)
· 국민연금	2036	2048
· 공무원연금	1997	-
· 사학연금	2020	2030

<자료원>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한국보험학회

22.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 이외에도 통일비용 등 다양한 재정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현재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나 앞으로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 위험요인이 재정건전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視界 하에서 위험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Ⅲ. 2006년 경제전망

A. 국내외 경제여건

23. (2006년 여건은 2005년보다 나쁘지 않을 전망) 대외여건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와 주요국 통화의 변동성이 금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5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등이 경제에 불확실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세계경제의 호조세 지속) 2003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어온 세계경제는 2006년에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도 2005년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 것이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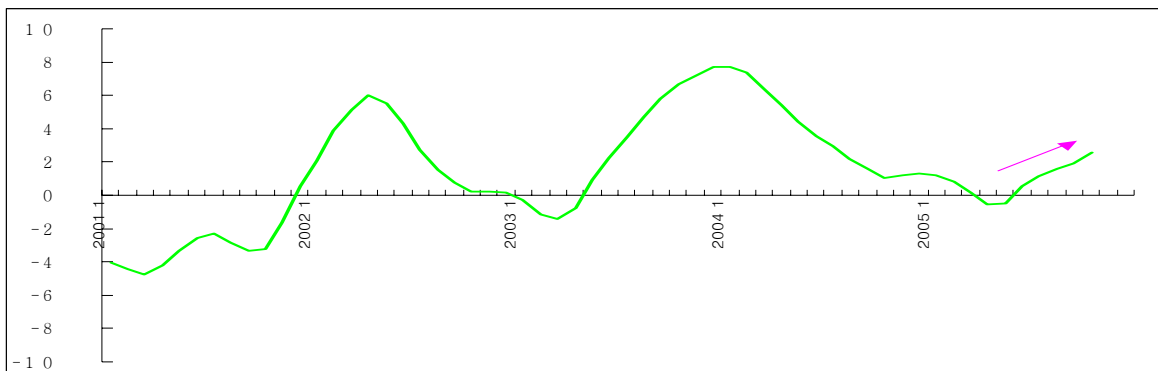
일본·유로 등 그간 부진했던 지역의 경우에도 경제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내면서 OECD 경기선행지수가 2005년 4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잠재성장률	05년 전망		06년 전망	
		IMF	OECD	IMF	OECD
세계 성장률	-	4.3%	2.7%	4.3%	2.9%
미 국	3% 내외	3.5%	3.6%	3.3%	3.5%
유 로	2% 내외	1.2%	1.4%	1.8%	2.1%
일 본	1.5~2.0%	2.0%	2.4%	2.0%	2.0%
중 국	8% 내외	9.0%	9.3%	8.2%	9.4%
세계 교역량	-	7.0%	7.3%	7.4%	9.1%

<註> IMF(05.9), OECD(05.11) 기준.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 기준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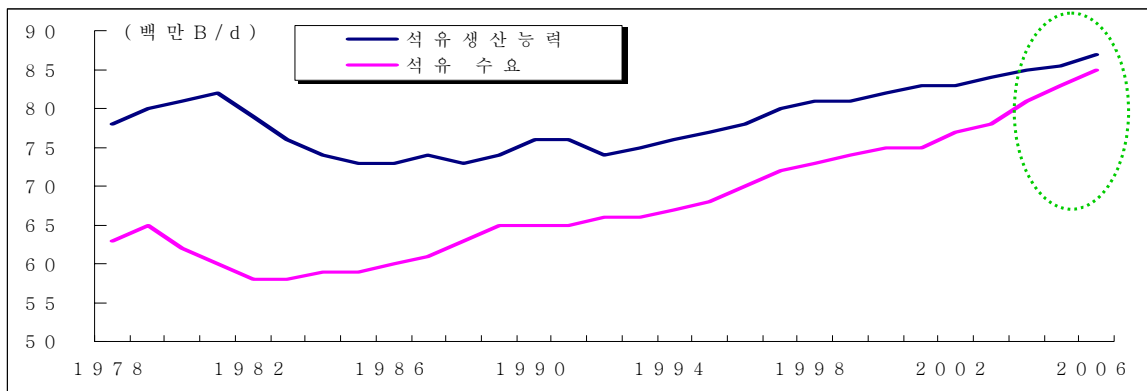


-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 2005년 3/4분기중 Dubai油가 배럴당 59\$대까지 상승하는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4/4분기 이후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둔화 예상, 美 멕시코만의 생산시설 일부 회복 등에 따라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2% 내외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산유국의 공급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수급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 불확실요인도 있어 50\$대의 고유가 추세는 200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각 기관별 2006년 수요 증가 전망(05.12) : EIA 2.0%, IEA 2.2%, OPEC 1.9%

석유 생산능력 및 수요 추이



주요 기관별 향후 유가 전망 (Dubai油 기준, \$/B)

	04년	05년	06년 전망		
			(05.10월)	(05.11월)	(05.12월)
(실적)	33.6	49.4	-	-	-
美 에너지정보청(EIA)	-	-	57.5	57.4	56.3
美 캠브리지에너지研(CERA)	-	-	49.5	48.0	52.3
英 세계에너지研(CGES)	-	-	53.5	48.4	47.4

<註> 유종간 평균가격차(WTI-Dubai : 7\$/B, Brent-Dubai : 5\$/B)를 적용하여 조정

- **(미 달러화 강세현상은 제한될 가능성)** 美 연준의 금리인상기조와 여타 국가와의 성장 격차 확대 등으로 나타났던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현상은 200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6%를 상회하고 있어 달러화 강세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엔/달러(기간평균) : (04)108→(05.1/4)105→(2/4)108→(3/4)111→(10~1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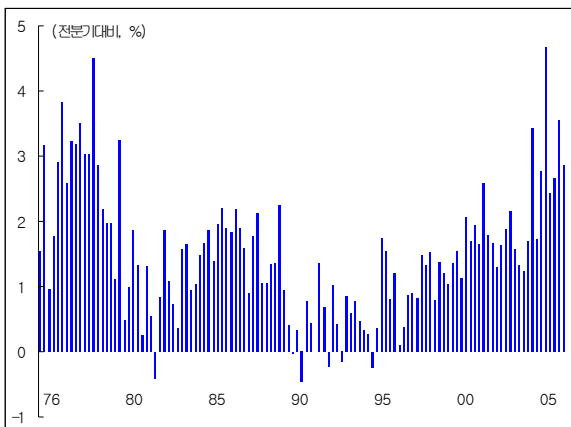
* 주요 투자은행들은 美 연준이 최소 2~3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만기 시점)	(05.12)	(06.3)	(06.6)	(06.12)
·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금리	4.17	4.51	4.76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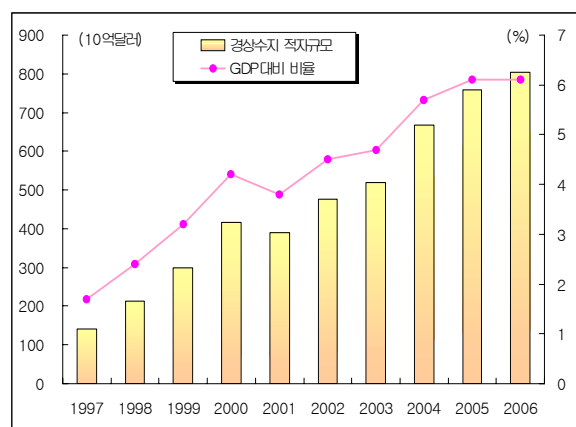
24. (하방위험요인은 상존) 대외 여건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에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며,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2006년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i) 유가의 경우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중동지역 정세 변화나 자연 재해 등으로 추가 급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ii) 미국 등 국가에서 큰 폭 상승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금리 상승에 따라 조정을 받을 경우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i) 또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대외불균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흑자국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커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이외에도 조류독감의 확산 등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지수 상승 추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



B. 2006년 거시경제의 움직임

25. (주요 고려사항) 2006년 경제전망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경제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회복 속도와 수준 및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는지 여부
- 내수회복을 반영한 설비투자의 회복정도
- 위축국면에 있는 건설투자의 증가수준
- 수출의 두자리수 증가세 지속여부
- 경기회복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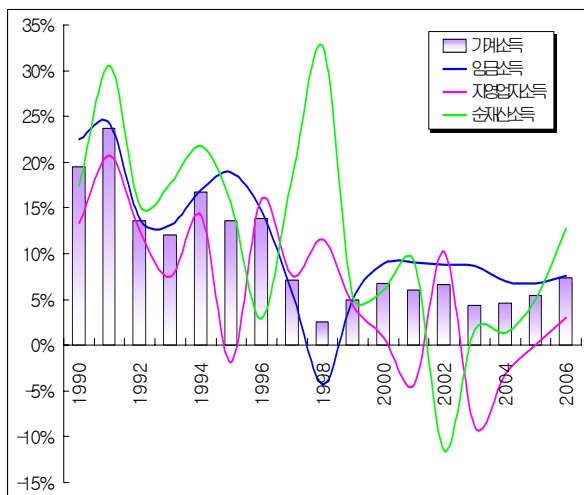
26. (민간소비) 최근 소비가 장기추세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가계의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6년 소비는 4%대 중반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가계 소득여건은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2000년대 들어 비임금 소득을 중심으로 부진했던 가계소득은 2005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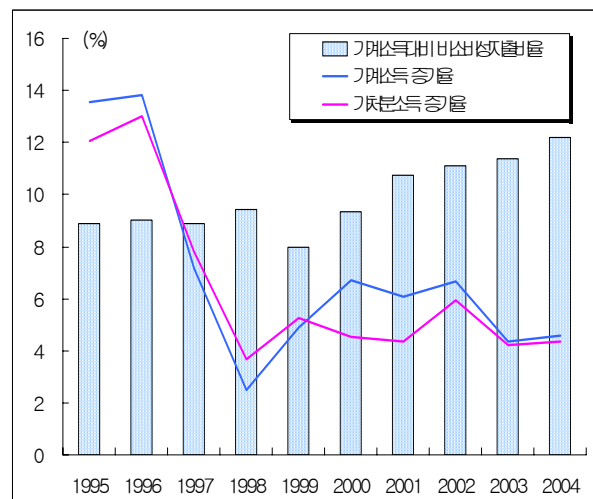
가계소득을 항목별로 점검해 보면, (i) **임금소득**(비중 74%)은 고용 및 임금 상승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소득과 비슷한 7% 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ii) **자영업자 소득**(비중 16%)은 공급과잉, 대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2006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iii) **순재산소득**(비중 10%)은 경기회복을 반영한 시장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의 빠른 증가에 따라 가계소득보다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가계소득 항목별 추이 및 전망



비소비성지출 추이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의 진전 상황과 고용 증가규모 등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소득여건의 개선추이도 **2006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 이외의 여건도 나쁘지 않을 전망) 최근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부채 조정 및 富의 효과도 소비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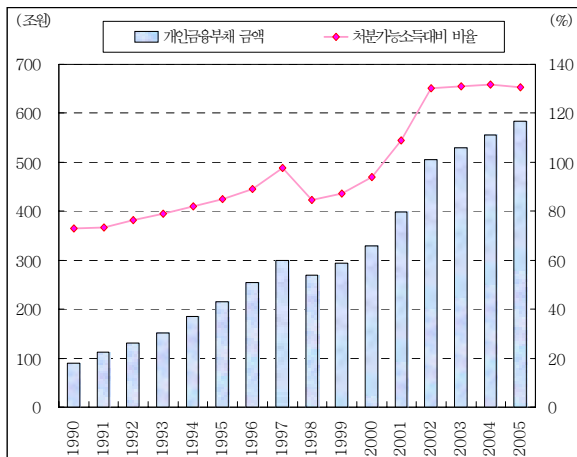
신용카드 등 가계부채 문제는 2003년 이후 상당 수준 조정이 진전되어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간의 부채조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로 과거보다 많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가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서는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 회복이 제약을 받을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가계지급이자/소득(%) : (00)9.2→(02)9.5→(04)8.8, 미국(04년)7.1, 일본(03년)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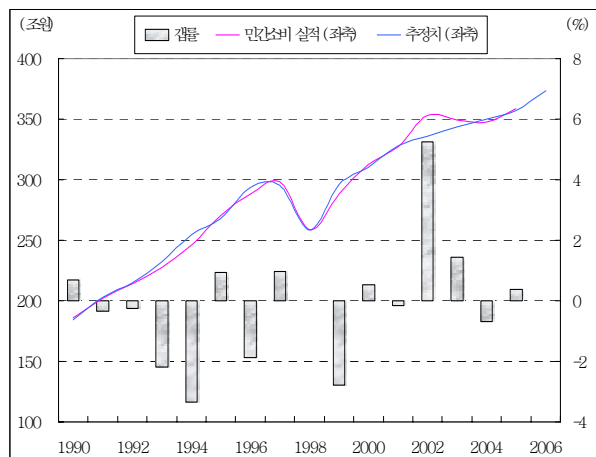
富의 효과는 최근의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의 호조세를 반영하여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부동산가격이 8.31 대책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이에 따른 상쇄효과로 민간소비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민간소비는 장기추세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2005년 들어 나타난 회복세를 반영하여 민간소비는 장기추세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2006년에는 가계 소득여건의 개선과 함께 증가세가 4%대 중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가계저축률이 여전히 5%대의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세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금융부채 추이



2006년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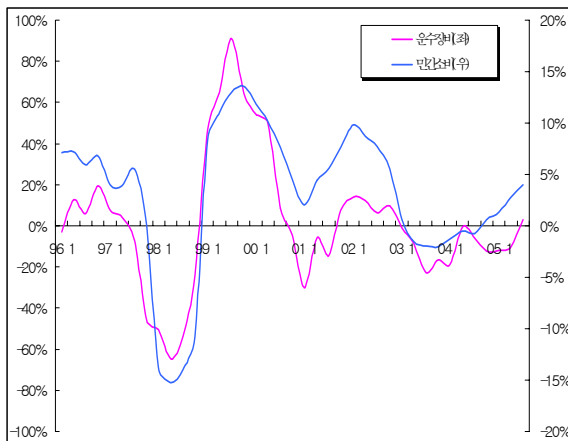
<註> 민간소비 추정치는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금리 등으로 구성된 장기소비함수를 통해 추정, 꺾음 = (민간소비 실적치 - 추정치) / 추정치

27. (설비투자)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기계류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운수장비 투자가 회복되면서 6%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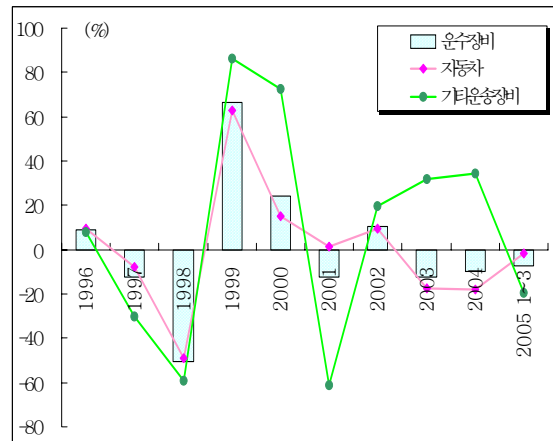
- (기계류와 운수장비) 기계류 투자는 그간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5년 3/4분기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6년에도 경기 회복 속에 그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장비 중 자동차(비중 80%) 투자는 그간 내수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압력도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선박 등 기타 운수장비(비중 20%) 역시 주요 업체들의 내년도 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장비 투자와 민간소비



운수장비 투자추이



- (투자여건도 양호한 모습)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수익성, 설비투자조정압력, 최근 투자심리 움직임 등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2005년에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나타낸 기업의 수익성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환율의 상대적 안정, 글로벌 IT경기 회복 등 대외여건의 호전, 국내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조정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 증가에 상응한 생산능력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평균가동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회복으로 내수 업종에서도 조정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투자심리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설비투자조정압력	8.0	8.1	6.1	2.2	△0.1	1.6	4.3
(수정 조정압력)	16.3	15.7	11.8	5.5	5.1	5.5	8.2

<註> 수정조정압력은 6개 수출주력업종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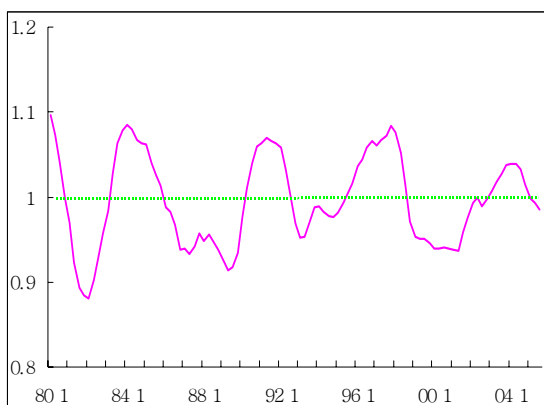
-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나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2006년 설비투자는 그간의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들이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투자성향도 보수화되고 있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8. (건설투자) 건설경기의 둔화국면 속에 8.31대책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나 2% 내외의 증가세는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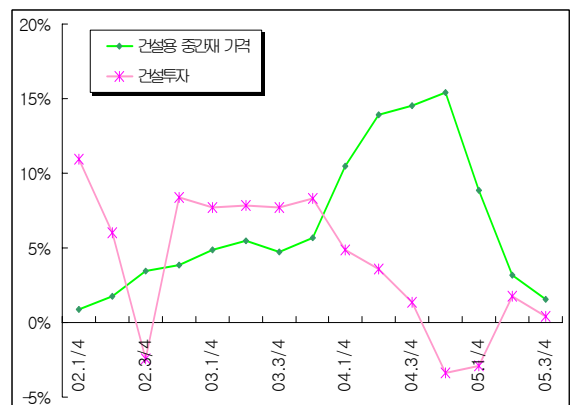
- **(순환국면상 둔화세 지속)** 건설경기는 2003년말에 정점을 지난 후 위축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건설용 중간재 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빠르면 2006년 하반기에는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 그간의 건설경기 순환주기를 살펴보면 순환국면은 약 5년 정도이고, 수요측면의 충격이 있을 경우 먼저 물량변수(건설투자)가 반응하고 시차를 두면서 가격변수(건설용 중간재 가격)가 반응하는 패턴을 나타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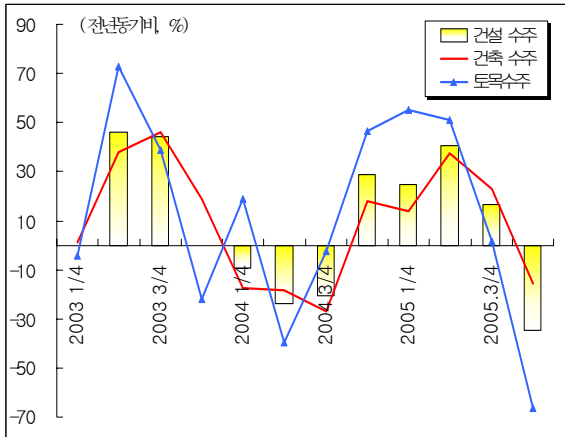
건설투자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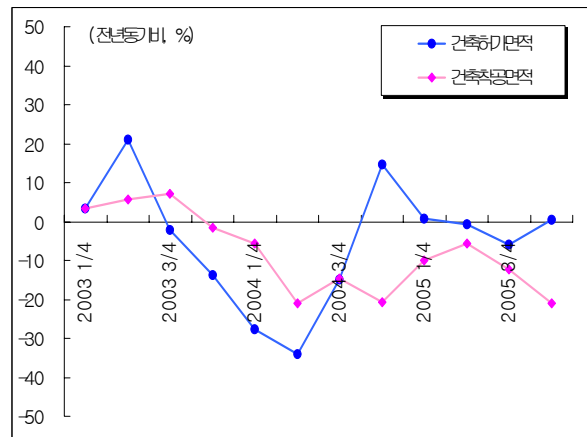
건설투자와 건설용중간재 가격 추이



건설수주 추이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추이



* 05.4/4분기는 10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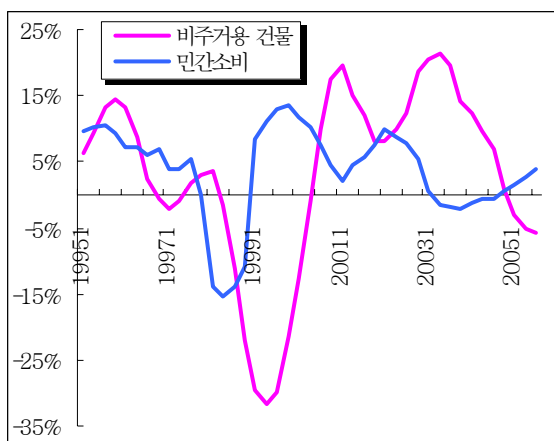
- **(공종별 추이 및 전망)**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도 2004년 하반기 이후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와의 상관성(4~5분기 후행)을 감안하면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목건설은 SOC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 민자사업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OC 투자(예산, 조원) : (05)18.3 → (06)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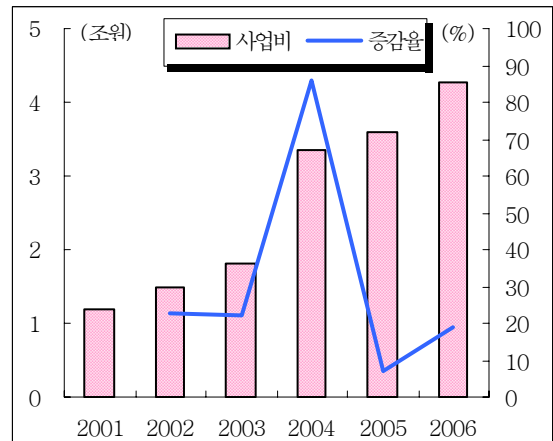
* BTL 집행액(예산, 조원) : (05)0.5 → (06)3.5

BTO 집행액(예산, 조원) : (05)1.8 → (06)2.4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민간소비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 **(민간부문의 부진이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로 보완)** 2006년중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급격한 위축세는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 (수출입) 세계경기의 호조세가 예상되는 등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 내년중 수출(통관기준)은 11%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이며 경상수지도 150억불 내외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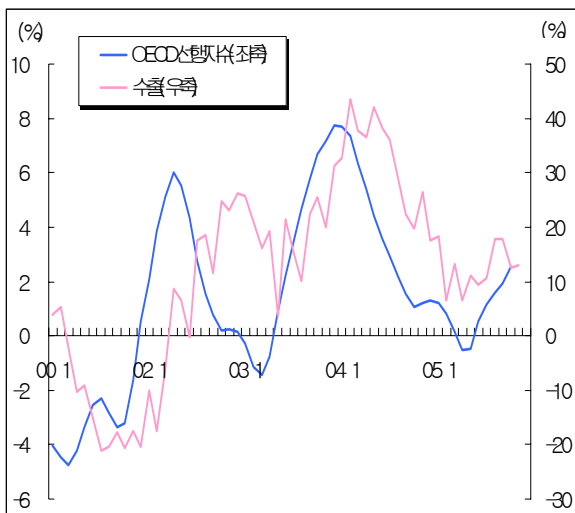
- (두자리수 수출 증가세 지속) 우리 수출에 9개월 정도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추세이며,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해외 수요는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1~10위) 수출품목수 : (97)1,114→(00)1,140→(04)1,284
 <자료원>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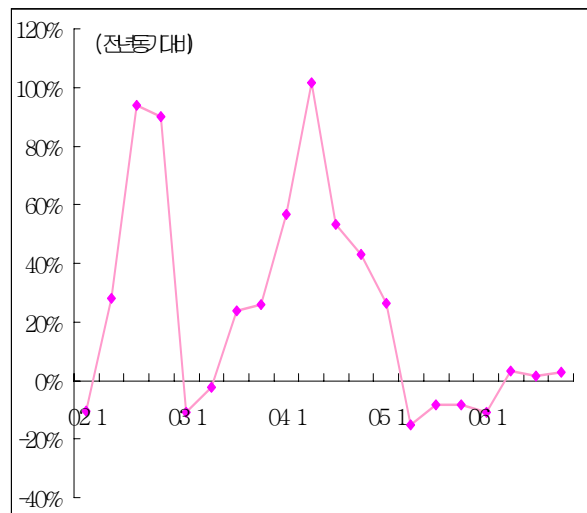
특히, 2005년중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위축되었던 글로벌 IT경기가 재고조정을 마치고 2006년에는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20%대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5년 들어 4% 수준의 증가에 그쳤던 IT 품목 수출이 2006년에는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수출은 세계경기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한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004년 2,000억불 돌파 이후 2년 만에 3,0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선행지수와 수출 증가 추이



세계 반도체 매출액 추이 및 전망



- (수입 증가세는 소폭 둔화 전망)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비중 15%) 수입수요는 확대되겠지만,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원자재(비중 50%) 수입액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수입 증가세는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50억불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 2006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흑자규모가 금년의 180억불 수준보다 다소 줄어든 150억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입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350억불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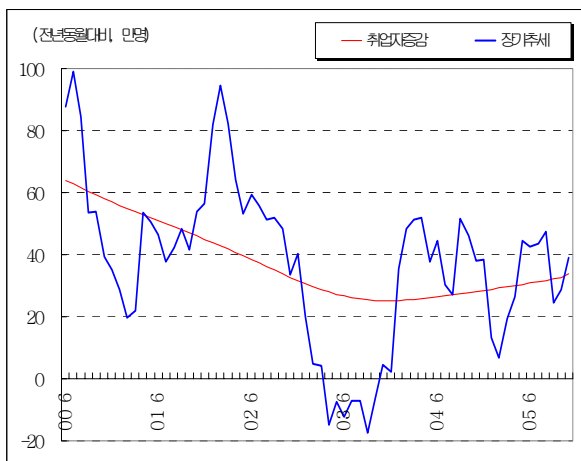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5년 $\Delta 140$ 억불에서 $\Delta 160 \sim 170$ 억불로 확대되어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수지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을 중심으로 대외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 (고용)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취업자가 35~40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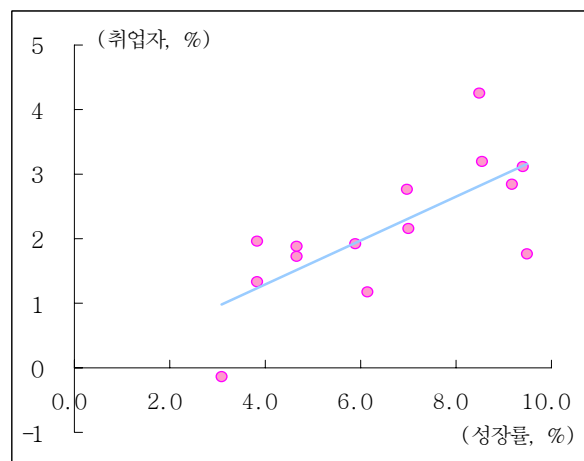
- **(추세수준 이상의 취업자 증가 전망)** 취업자 증가추이, 내수중심의 경기회복 상황, 산업별 노동수요 등을 통해 볼 때, 내년중 취업자 증가규모는 추세수준(34만명 내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2000년 이후 우리 경제는 **34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i) 5% 성장을 전제하였을 때 취업자 증가규모는 **37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내수 중심의 성장 내용을 고려할 경우 **40만명**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ii) 산업별 노동수요를 통해보면 건설업과 농림어업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35~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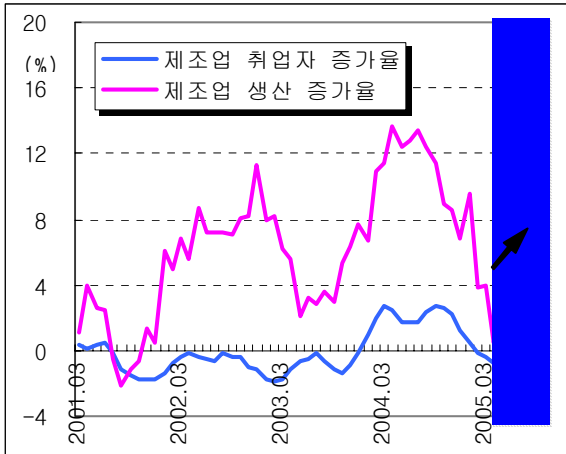


성장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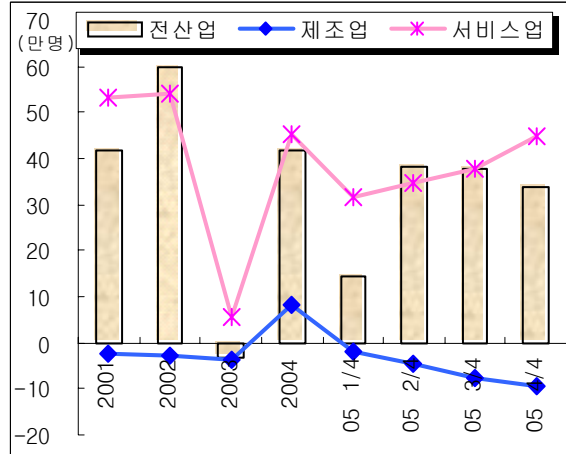


제조업 고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용흡수력이 낮은 IT·대기업 부문이 생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고용창출능력이 큰 중소기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반전하고 4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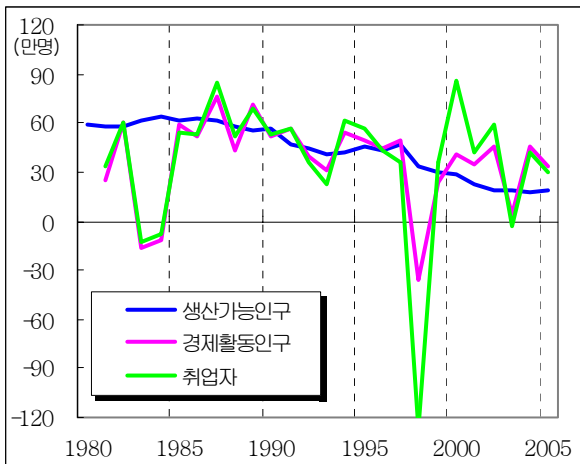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 2006년 실업률은 2005년 3.8% 보다 소폭 하락한 3.6~3.7%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를 반영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확대되겠지만 취업자가 비슷한 수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 인구 증가규모 추이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고용의 질은 다소 개선 전망) 기업 채용확대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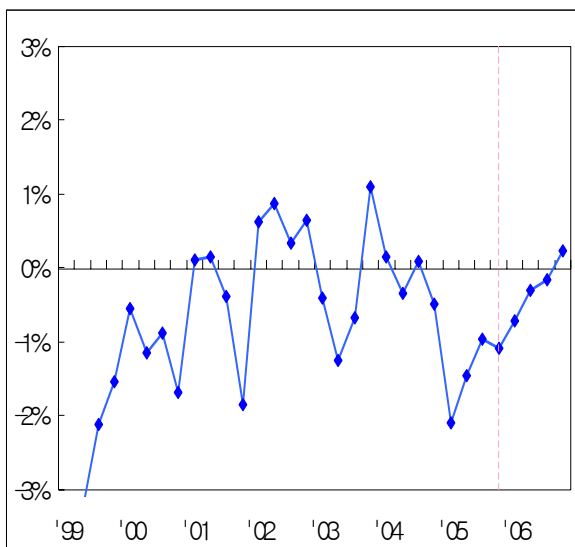
31. (물가) 2006년 소비자물가는 물가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상승 폭은 크지 않아 3.0%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 (총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나 그간의 경기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디플레이 갭이 지속되어 물가 압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의 상승 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 또한 크지 않을 것이므로 공급측면의 물가요인은 2005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노동비용도 금년 수준(3%대 후반)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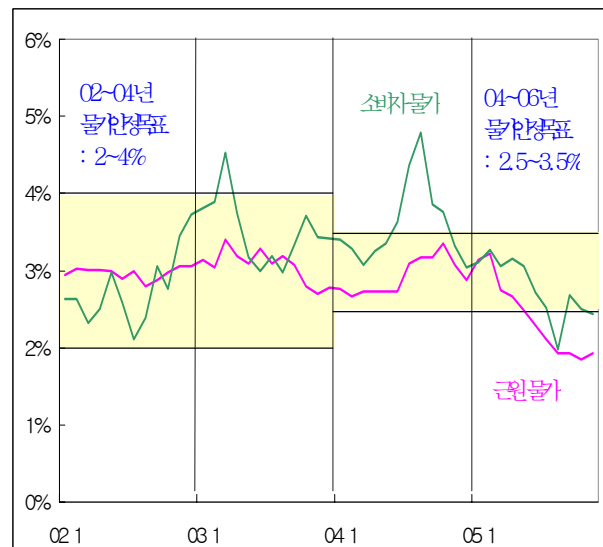
농축수산물은 2005년에 기상여건과 작황호조로 이례적인 안정세를 나타낸 점을 감안할 때 다소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공공요금은 예년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에서 안정될 전망) 공급측면의 물가 불안요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크지 않아 근원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범위 내인 2%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갭률 추이 및 전망



근원인플레이션 추이



<주> GDP 갭률 = (실질 GDP - 잠재 GDP) / 잠재 GDP

C. 2006년 경제전망

32. (경기 회복의 본격화 속에 성장 및 고용 개선 전망) 2006년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과 3% 수준 물가, 35~40만명의 고용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성장)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계절조정 전기비로 1%대 초반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중 上低下高의 성장에 따른 기술적 효과로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낼 전망)
- (고용)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는 추세적인 증가수준(34만명 내외)을 상회하여 35~40만명 수준 증가할 전망입니다.
- (물가) 내수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 실질 GDP(%)	4.6	3.9	5 내외
▪ 고용 (만명)	42	31	35~40
▪ 소비자 물가(%)	3.0	2.7	3 수준
▪ 경상수지 (억불)	282	180	150

33. (하방위험요인은 지속) 이상의 전망은 세계 경기,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금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하방위험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상황이 전망 수준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장률 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2005.6)

- 세계경제 1%p 둔화시 성장 $\Delta 1.1\%p$ 하락, 물가 $\Delta 0.4\%p$ 하락
- 국제유가 10% 상승시 성장 $\Delta 0.2\%p$ 하락, 물가 0.2%p 상승
- 원화환율 5% 하락시 성장 $\Delta 0.3\%p$ 하락, 물가 $\Delta 0.2\%p$ 하락

34. (2006년 이후 경제의 모습) 불확실성은 있으나 내년의 경기흐름은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기의 호조세가 점차 마무리될 경우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2006년중 민간 소비 등 내수기반이 강화될 경우 2007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6년 경제 전망 >

	2004년	2005년					연간 ^e	2006년
		1/4	2/4	3/4	4/4 ^e			
<전망 전제>								
▪ 세계경제(ppp)	5.1	-	-	-	-	4.3	4.3	
▪ 국제유가(Dubai,\$)	36.2	41.2	47.9	55.5	52.9	49.4	54.0	
<실질 성장>								
▪ 총소비	4.6	2.7	3.3	4.5	4.8	3.9	5.0	
- 민간 소비	0.2	1.7	3.0	4.1	4.2	3.3	4.4	
- 민간 소비	△0.5	1.4	2.8	4.0	4.4	3.1	4.5	
▪ 총고정자본형성	1.9	0.1	2.1	2.0	2.0	1.6	3.8	
- 설비 투자	3.8	3.1	2.9	4.2	4.5	3.7	6.5	
- 건설 투자	1.1	△2.9	1.7	0.4	0.5	0.2	2.0	
▪ 총수출	19.7	7.4	5.5	11.5	10.0	8.7	9.2	
- 재화 수출	21.0	8.1	6.5	13.3	12.0	10.0	9.5	
▪ 총수입	13.8	5.2	5.5	10.7	7.0	7.1	9.2	
- 재화 수입	13.8	3.1	3.6	10.3	7.5	6.1	9.0	
<경상 성장>								
▪ GDP deflator	7.3	3.0	3.3	3.8	5.8	4.0	7.5	
▪ GDP deflator	2.7	0.3	0.0	△0.6	1.0	0.2	2.5	
<노동 시장>								
▪ 취업자 증감(만명)	42	14	38	38	30	31	37	
▪ 실업률	3.7	4.2	3.7	3.6	3.6	3.8	3.7	
<물 가>								
▪ 소비자 물가	3.0	3.2	3.0	2.3	2.5	2.7	3.0	
▪ 근원 물가	2.9	3.0	2.5	1.9	1.8	2.3	2.7	
<경상 수지>(억불)								
▪ 상품 수지(BOP)	281.7	59.5	27.6	25.2	67.7	180	150	
- 상품수출(통관)	375.7	92.9	86.5	77.5	96.5	350	345	
- 상품수출(통관)	31.0	12.7	9.0	15.4	12.1	12.3	11.4	
- 상품수입(통관)	22.5	14.7	15.1	20.7	12.7	15.8	12.7	
▪ 상품외 수지(BOP)	△94.0	△33.4	△58.9	△50.3	△28.8	△170	△195	

IV. 종합 평가

35.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으나 회복의 강도는 과거보다 약한 수준) 금년중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6년에도 이어져 앞으로 점차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러나 아직도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미래 소득을 결정할 투자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경기회복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까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36.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지속) 경기 부진과 구조적 요인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도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 경제의 양극화는 경기회복과 함께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나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지속성장기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보다 중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 요소투입 둔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개방과 경쟁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쟁에서 탈락하는 부문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7. (미래 위험요인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이 미루어질수록 경제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視界 하에 미래 위험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기관의 200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금리는 기간평균)

	04년	05년			05년 ^e						06년 ^e					
	연간	1/4	2/4	3/4	한은 (12.6일)	KDI (12.16일)	금융研 (11.30일)	삼성研 (12.1일)	LG研 (12.5일)	NABO (10.17일)	한은 (12.6일)	KDI (12.16일)	금융研 (11.30일)	삼성研 (12.1일)	LG研 (12.5일)	NABO (10.17일)
<전망의 전제>																
▪ 세계경제 성장률	5.1				4.2	4.3	-	3.7	4.2	-	4.0	4.3	-	3.3	4.1	-
▪ 국제유가(Dubai, \$/B, 평균)	36.2	41.2	47.9	55.5	51.0	51.0	-	50.0	49.2	-	55.0	51.0	56.0	47.0	56.0	-
▪ 환율(원/달러, 평균)	1,145	1,023	1,008	1,029	-	1,022	1,022	1,026	1,026	1,023	-	1,010	1,010	1,014	1,005	1,010
▪ 금리(회사채 3년)	4.11	3.94	3.78	4.19	-	-	4.3	4.3	4.3	4.2	-	-	5.2	5.6	5.5	4.8
1. 성장률¹⁾	4.6	2.7	3.3	4.5	3.9	3.9	3.9	3.8	3.9	3.7	5.0	5.0	4.7	4.8	4.6	4.7
▪ 총소비	0.2	1.7	3.0	4.1	-	3.3	3.1	-	3.0	-	-	4.2	4.6	-	3.7	-
- 민간 소비	△0.5	1.4	2.8	4.0	3.0	3.1	3.1	3.2	2.8	2.8	4.5	4.2	4.9	4.9	3.6	4.2
- 정부 소비	0.7	3.2	4.1	4.6	-	-	2.9	-	4.0	-	-	-	3.5	-	3.9	-
▪ 총고정자본형성	1.9	0.1	2.1	2.0	-	1.8	2.1	2.1	2.0	-	-	3.4	3.4	3.8	3.6	-
- 설비 투자	3.8	3.1	2.9	4.2	3.9	4.1	3.7	4.2	4.1	3.3	5.4	6.9	6.2	6.5	6.8	5.8
- 건설 투자	1.1	△2.9	1.7	0.4	0.3	0.2	1.0	0.6	0.4	2.1	1.7	1.1	2.0	2.2	1.1	1.2
▪ 총수출	19.7	7.4	5.5	11.5	-	8.9	8.6	9.2	8.9	-	-	12.5	8.7	7.3	11.7	-
- 재화 수출	21.0	8.1	6.5	13.3	10.1	10.1	-	10.4	10.0	-	10.8	13.2	-	8.8	12.5	-
▪ 총수입	13.8	5.2	5.5	10.7	-	7.3	7.6	7.2	7.3	-	-	12.2	8.9	8.5	13.3	-
- 재화 수입	13.8	3.1	3.6	10.3	6.1	6.0	-	5.8	6.2	-	10.4	12.9	-	7.1	13.8	-
▪ 경상 성장률	7.3	3.0	3.3	3.8	-	-	-	3.9	4.0	-	-	-	-	5.6	5.6	-
▪ GDP deflator	2.7	0.3	0.0	△0.6	-	-	-	0.1	0.0	-	-	-	-	0.8	1.2	-
2. 고용²⁾ (취업자증감, 천명)	419	143	382	379	-	-	-	313	306	-	-	-	-	342	325	-
▪ 실업률	3.7	4.2	3.7	3.6	3.8	3.8	3.8	3.7	3.8	3.8	3.6	3.6	3.7	3.6	3.7	3.7
▪ 임금상승률(명목, %)	6.0	7.5	7.4	5.6	-	-	6.7	7.6	6.4	-	-	-	6.1	7.3	6.6	-
3. 물가(CPI, %)	3.0	3.2	3.0	2.3	2.7	2.7	2.8	2.9	2.8	2.9	3.0	3.0	3.0	3.6	3.2	3.2
▪ 근원 물가	2.9	3.0	2.5	1.9	2.3	2.3	-	2.4	2.4	-	2.7	2.7	-	3.1	2.7	-
4. 경상수지(억불)	281.7	59.5	27.6	25.2	175	168	-	-	-	158.3	160	124	-	-	-	117.7
▪ 상품 수지(억불)	375.7	92.9	86.5	77.5	344	349	343.2	362	330	-	360	319	321.8	284	383	-
- 상품 수출(통관, %)	31.0	12.7	9.0	15.4	12.5	12.3	12.3	13.0	12.4	12.6	10.3	12.9	11.3	9.2	11.3	10.8
- 상품 수입(통관, %)	25.5	14.7	15.1	20.7	16.5	15.9	16.5	16.7	16.5	16.3	10.9	15.8	13.4	12.1	10.4	11.7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94.0	△33.4	△58.9	△50.3	△170	△181	-	-	-	-	△200	△195	-	-	-	-

1) 주요 국제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5.0%(9.29일), WB 5.1%(12.15일), OECD 5.1%(11.29일), GI 6.0%(9.15일)

2) 한국노동연구원은 2006년 노동수요가 2005년 대비 약 40만명(최저 38만명~최대 4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3) NABO : 국회예산정책처